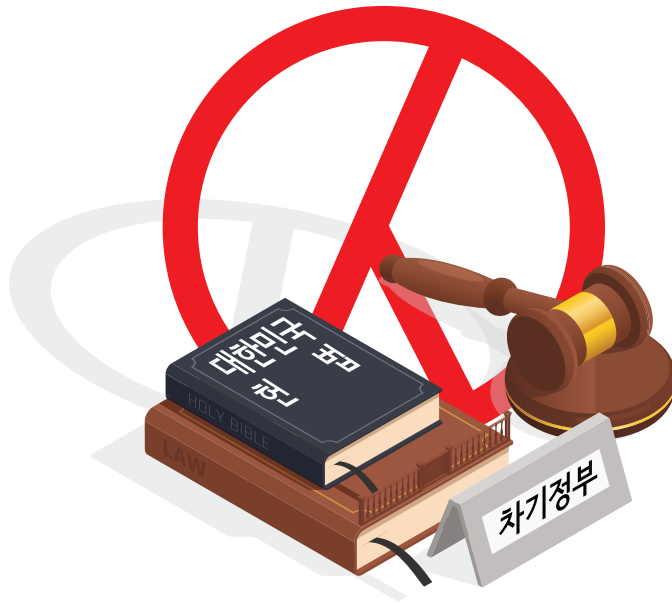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주 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5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13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29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 육	43
양 정 호 교수 (성균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71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2021 활동 사진) 소개 91

프로그램

1 부

사회 : 안 자 희 박사
본 연구회 부회장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김 상 훈 국회의원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김 미 령 소장
대구대학교 교령사회연구소

○ 분야별 발표

-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보건 • 의료.....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용 • 노동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교 육.....양 정 호 교수
(성균대학교 교육학과)
- 주거(부동산).....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참여교수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균 교 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

I. 서 론

- ☐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신사회적 위험 대비
- ☐ 제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대응
- ☐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복지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복지로 개념 전환 필요
- ☐ 기존의 국가주도주의, 개별급여 확대주의를 벗어나 균형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사회의 틀을 형성해야 할 시대적 요구 직면

Ⅱ. 역사적 시기 구분

- 1960~1970년대 :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친화정책
→ 선성장후분배, 가족책임 우선주의
- 1980~1990년대 : 사회복지정책의 형식 구조화
- 2000~2010년대 : 경기변동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 2020년대 : ? ⇒ 균형복지와 복지다원주의
 - 균형복지(국가복지-생활복지) 구현
 - 국가주도주의 → 3자(국가-시장-시민사회) 협력시대

3

Ⅲ. 기본 방향_1

- 포괄적 복지 구현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돌봄 등
- 적극적 사회정책 추구
 - 소득보장으로부터 기회보장으로 :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 후세대 부담 전가 방지 → 세대 갈등 방지 : 연금, 건강보험 개혁
 - 생활복지 활성화
 - 응익의 원칙 강화 : 대상(보편/선별주의)의 문제가 아닌 이용의 문제

4

Ⅲ. 기본 방향_2

- ☐ 급여방식의 통합화
 - ‘근로능력’과 ‘소득’ 기준으로 복잡한 급여 구조 통합
- ☐ 근로연계형(welfare to work) 복지 구조 지향
 - 고용 확대
 - ‘복지’와 ‘고용’ 결합
- ☐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 제거

5

Ⅳ. 과 제_1

- ☐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복지 의제(agenda)
 -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 적정 수준의 복지체계 구축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든든한 복지 구현 :
은퇴 후 생활안정,
100세 시대 건강보장시스템 구축,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6

IV. 과 제_2

□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상시 조직 전환 및 역할 강화
- 별도 조직 신설

□ 사회보장체계 구조 개혁

- 연금개혁, 건강보험 구조 개편
-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복지체계 구축 :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사회서비스 관련 고용 창출

- 시장 또는 준시장 중심의 고용 확충 원칙
-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 개발

7

IV. 과 제_3

□ 사회보장 급여체계 개혁

-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체계 구축 :
각종 사회수당 통합계좌 관리,
급여자격 및 수준 형평성 제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사회서비스 확대 지향 예) 기초연금 vs. 노인일자리
- 기회 제공 : ‘노력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예) 소득보장 vs. 기회보장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급여체계 마련

- 무상 국가복지 축소
- 응익의 원칙 강화 : 오남용 방지와 서비스 질 제고

8

IV. 과 제 _4

☐ 복지산업 생산성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용 확대와 질 제고

9

V. 결 론 _1

☐ 새로운 복지사회의 개념 정립 필요성

- ‘균형복지’ 개념 도입해야
- 복지의 목적 : 생활안정(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지원(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근로능력 유무 기준 -> 복지총량제 도입

☐ 재정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 ‘퍼주기식 복지’ 확산 경계
-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10

V. 결 론₂

□ ‘평등’의 가치 정립과 목표 재구성

- ‘소득분배 구조 개선’의 개념 재정립
- 생활안정성 강화와 급여의 형평성 제고

1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위원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평가 위원
(전)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전)보건의료산업학회 회장

차기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보건시스템 혁신



이 기 효 교수
보건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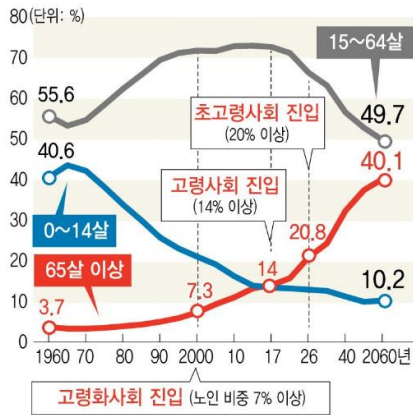


이 기 효(李起孝)
Key Hyo Lee,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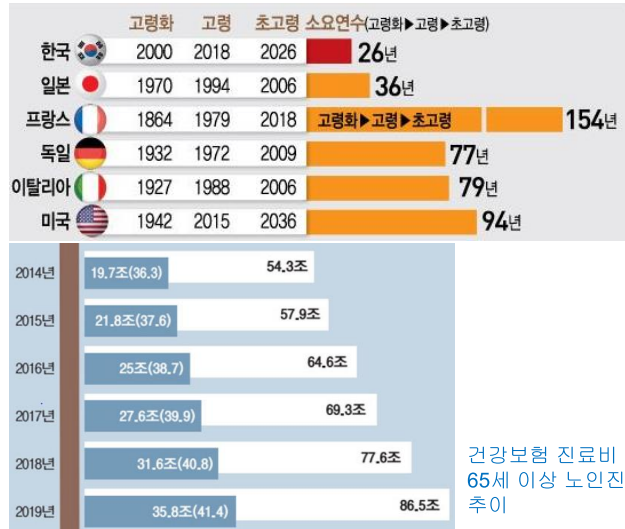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위원
-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
-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평가 위원
- (전)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 (전)보건의료산업학회 회장
- E-mail : keyinj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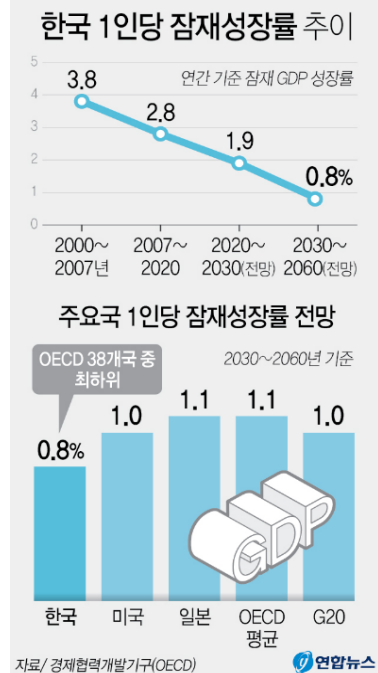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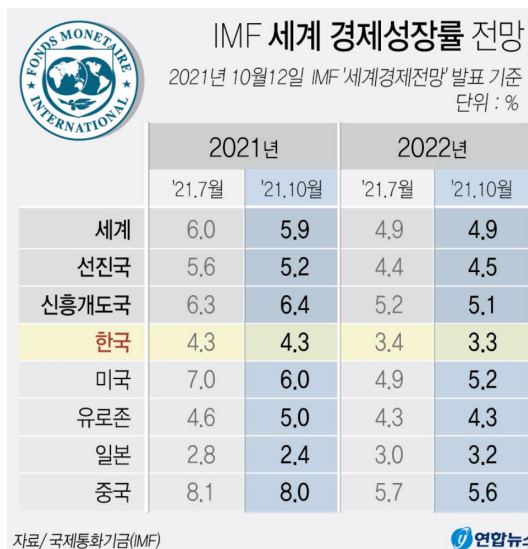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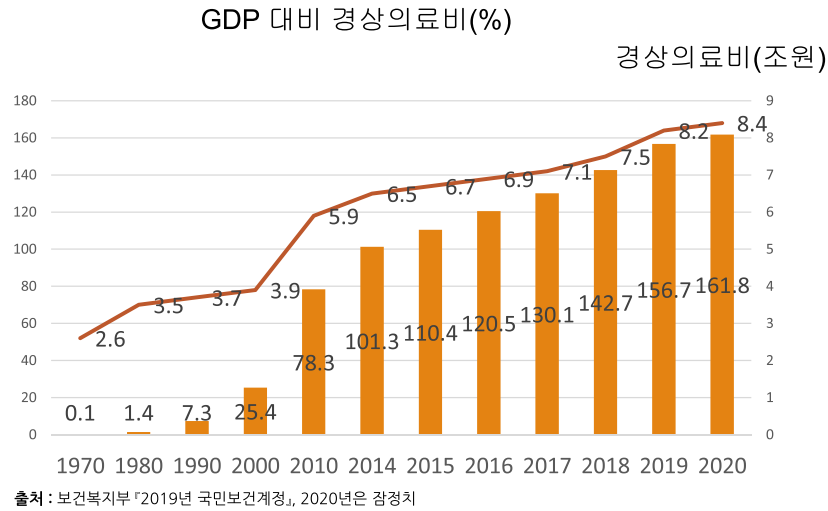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경제성장의 정체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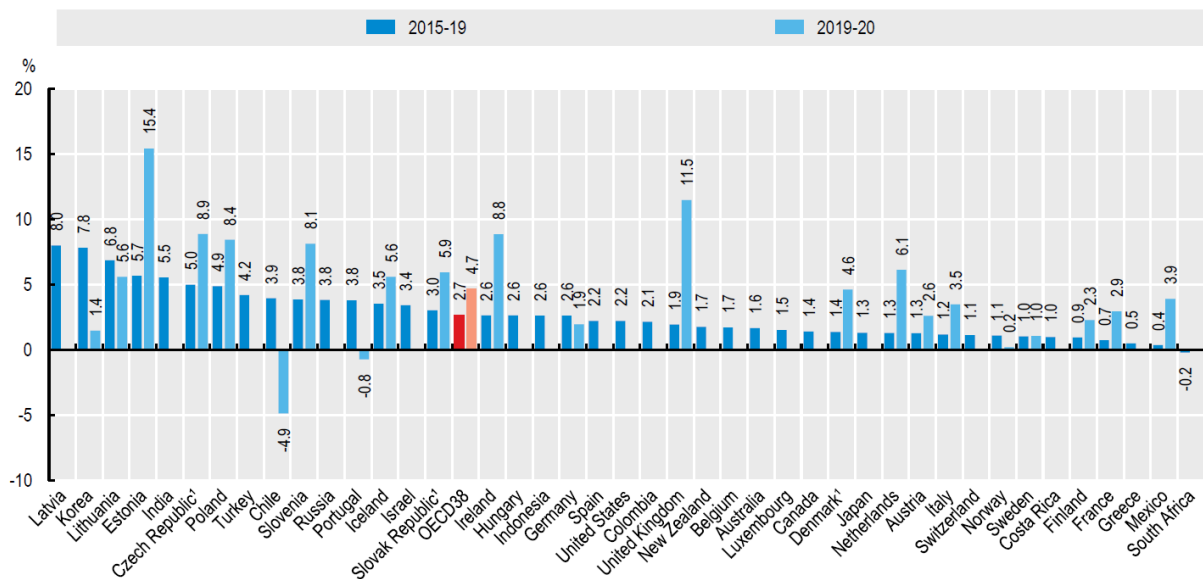


국민의료비의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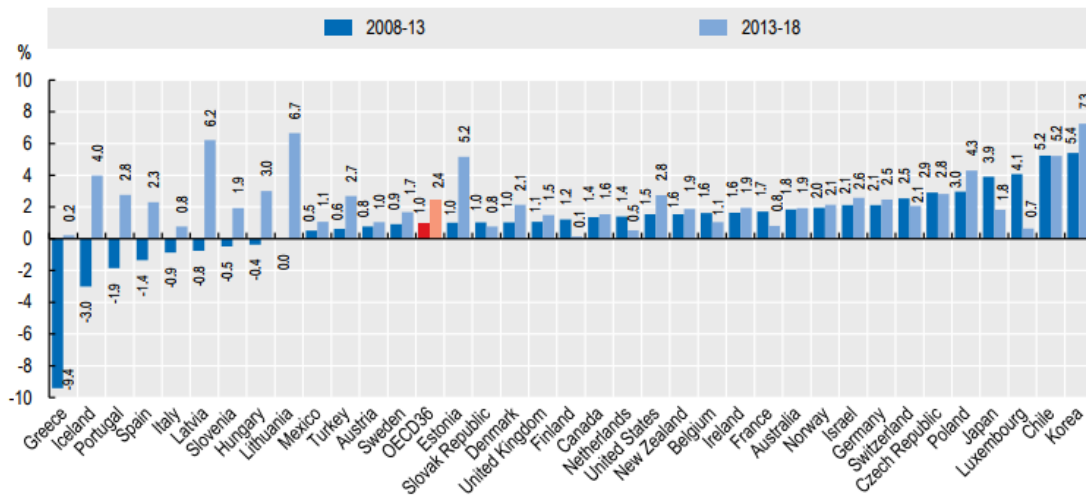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29년 10.4%에 도달할 전망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영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 : OECD 국가 비교 (최근 6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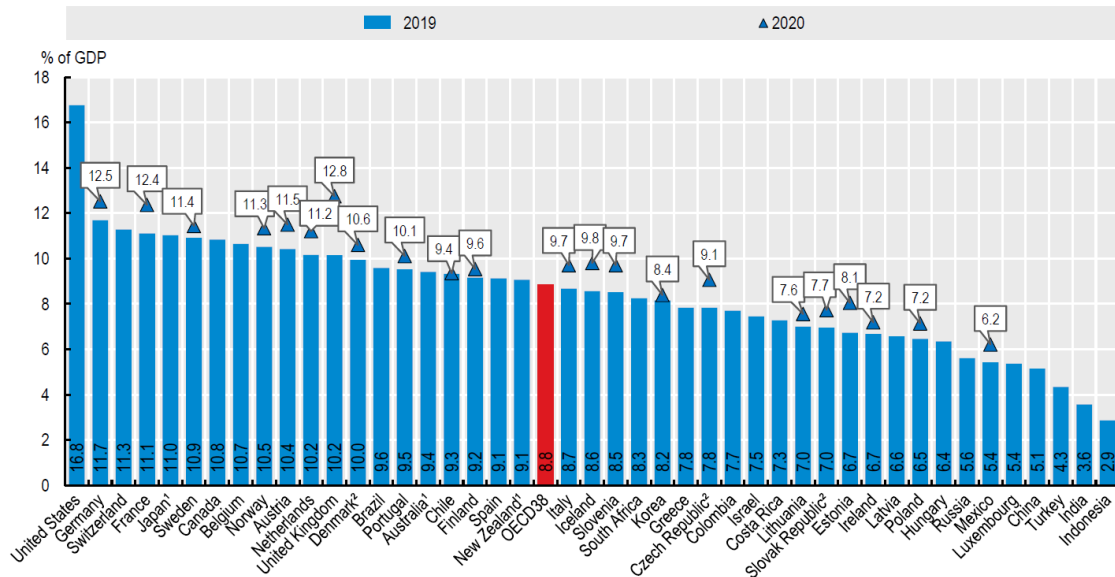
Note: OECD average growth rate for 2019-20 is based on the preliminary estimates for 22 countries. 1. OECD estimates for 2020.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21.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 : OECD 국가 비교, (2018년 기준 최근 10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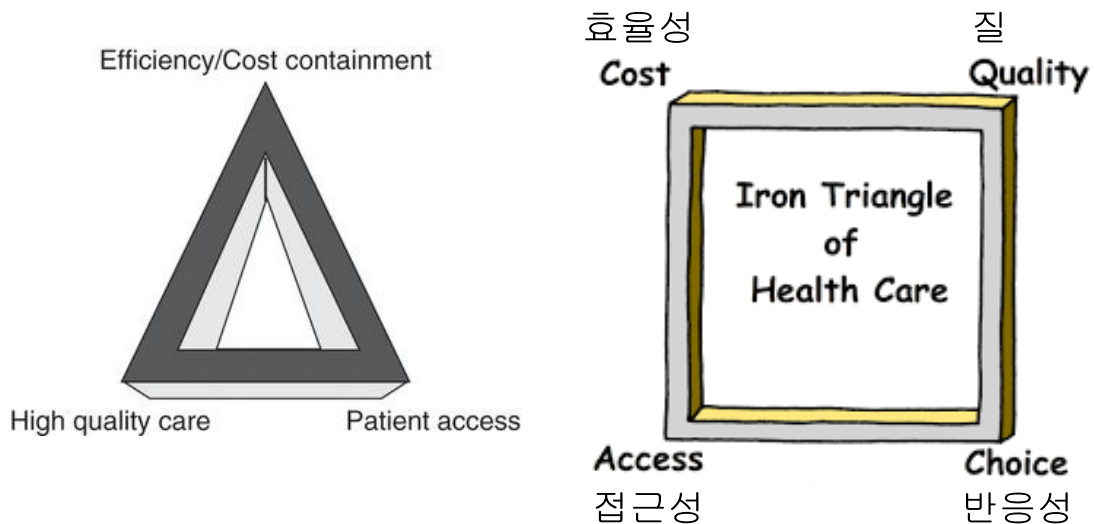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19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OECD 국가 비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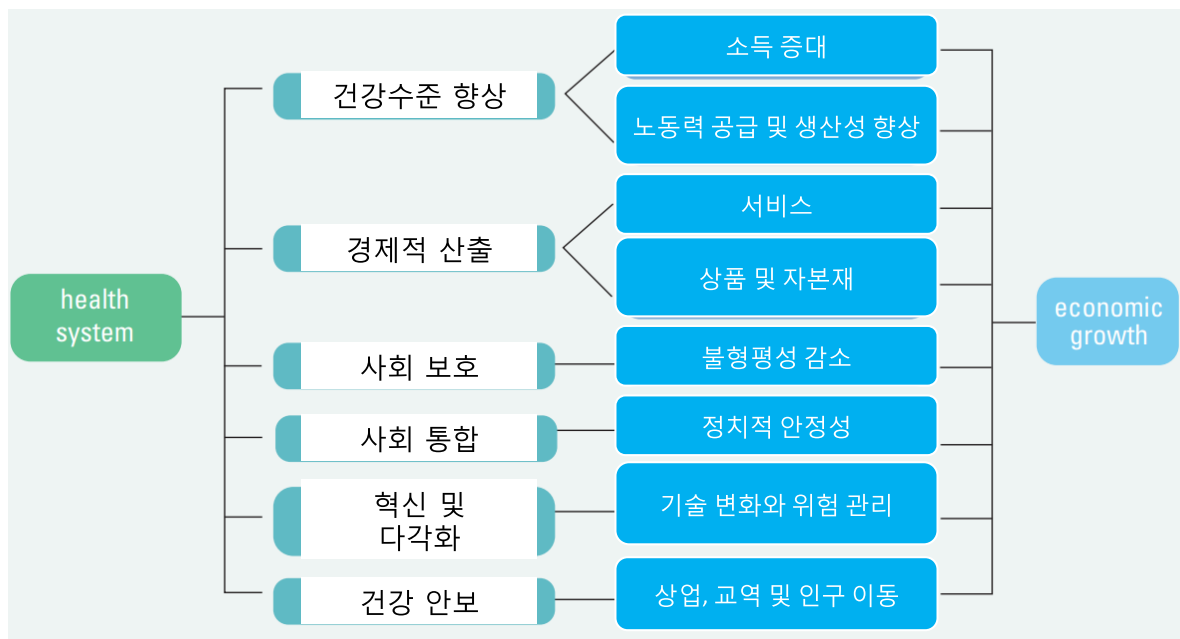


1. OECD estimates for 2019. 2. OECD estimates for 2020.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21,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보건시스템 혁신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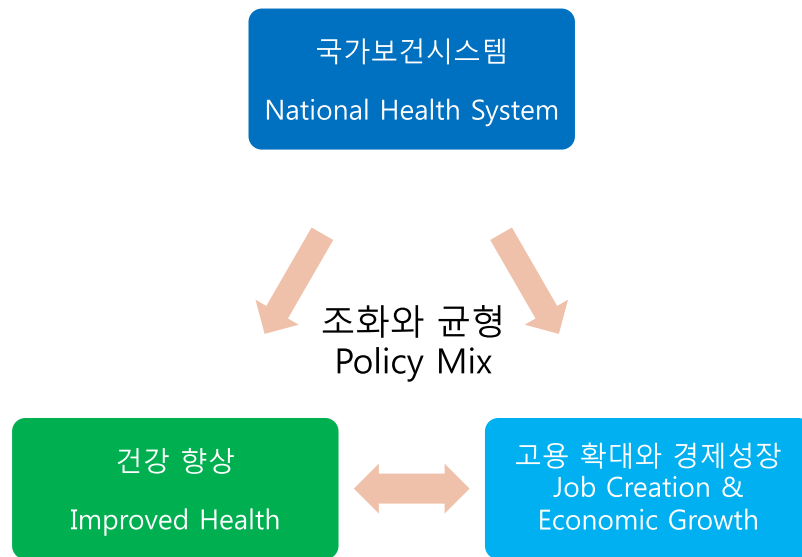
보건시스템과 경제성장



WHO. Working for health and growth: investing in the health workforce.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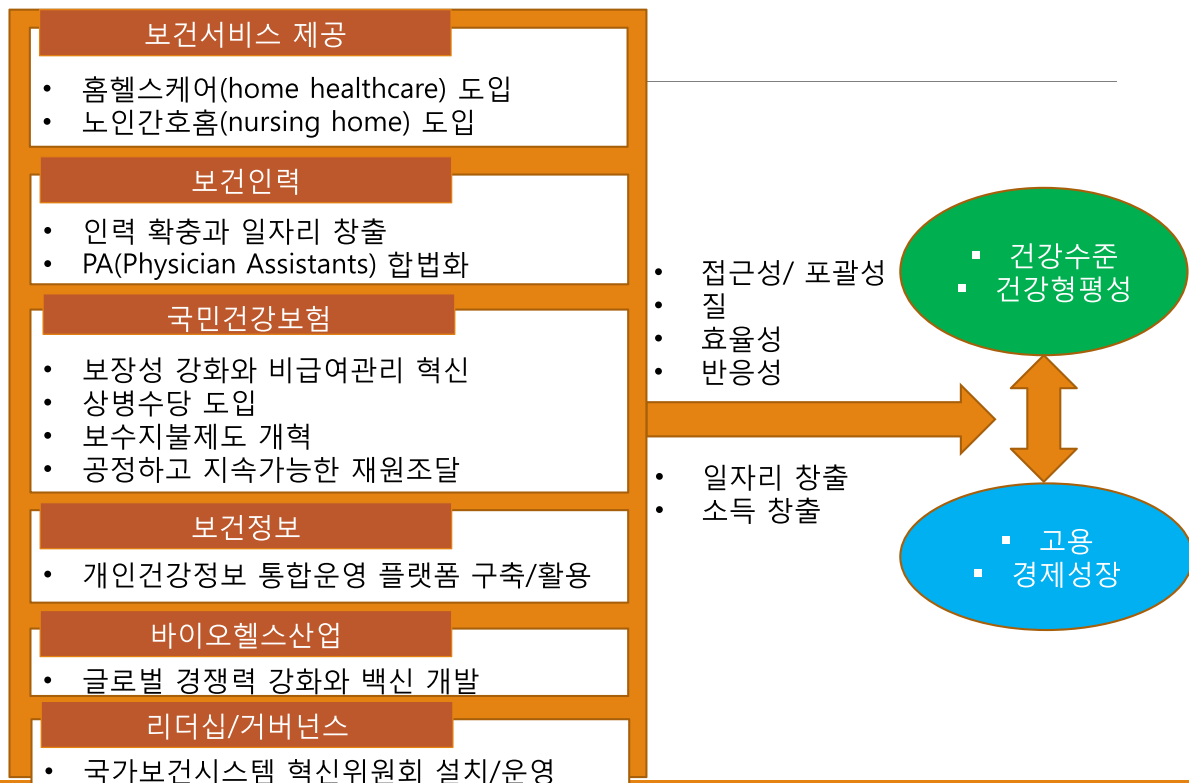
2/27/2002

보건시스템 혁신의 중요성



2/27/2002

국가보건시스템 10대 혁신 과제 제언



과제 1. 홈헬스케어 도입

- 가정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노인의 시설입소(병원입원)를 최소화하고, 가정에서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음
- 노인 보건 이외에 장애우 재활, 산후관리, 그리고 야간 영유아 진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되며,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보건서비스조직 형태
- 치료 보다는 모니터링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부터 홈헬스케어를 신속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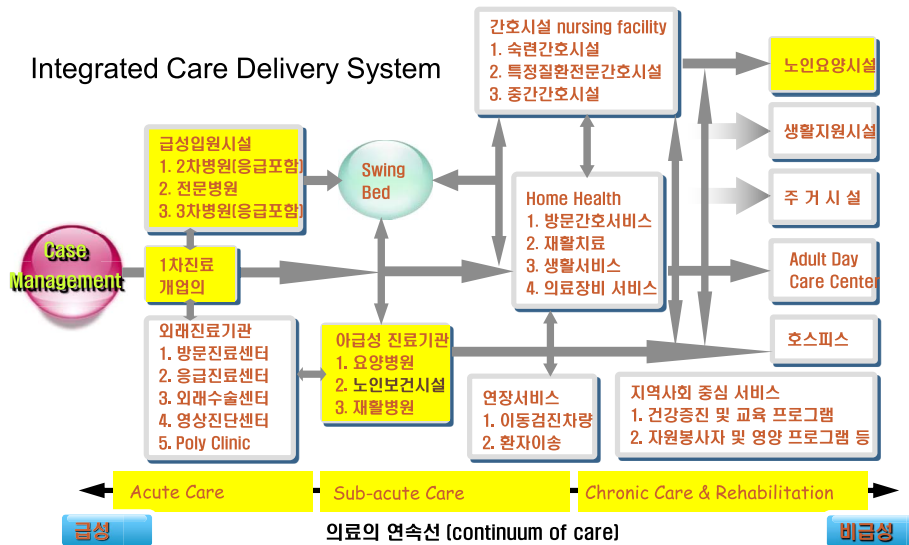


과제2. 노인 간호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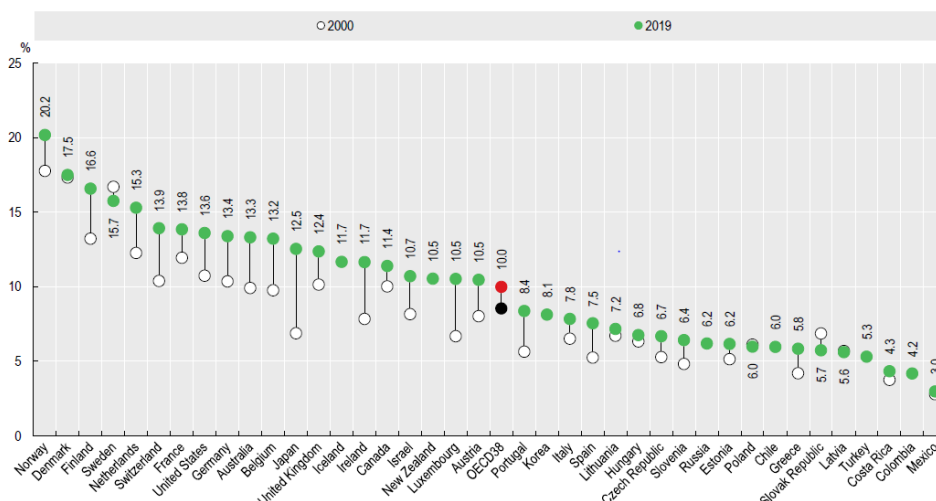
대상자	의학적 복합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 서비스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 입원 환자 서비스	간호 및 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생활지원	재활 및 생활지원
재원	건강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참고: 통합적 보건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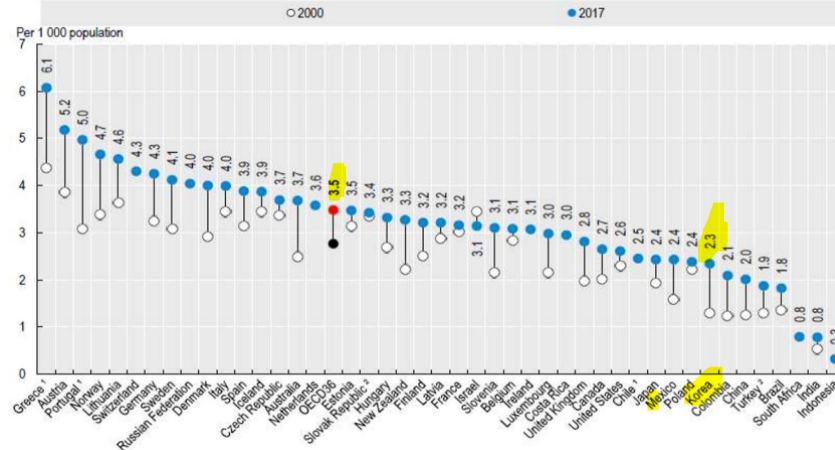
과제3. 인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 보건 및 사회복지종사자 비중이 8.1%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
-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수준 상승으로 의료비 급증추세의 지속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급속한 의료비 증가에 비례하여 보건부문 고용이 증가해야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



과제3-1. 인력 확충의 핵심 : 의사

- 의료수요(의료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는 매우 부족
- 고령화, 보장성 강화, 감염병 대유행 등 의료서비스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제약, 의공학,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의사 수의 증가는 협력하여 일하는 보건인력의 고용 증가를 수반
- 보수지불제도 개혁 등의 정책 배합으로 의사 수 증가가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음



과제3-2. 신규 직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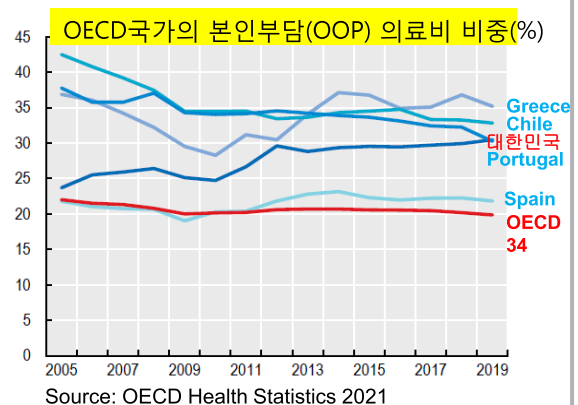
- 기술 혼합 개혁(skill-mix reform)의 일환으로서 의사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팀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술 혼합 개혁은 **의사의 업무범위(scope of practice)**를 재구성하여 의사는 더욱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고도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정형적인 업무는 새로운 보건의료 직종이 담당하도록 분업화하여, 이들 직종들이 팀을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혁을 의미하며,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보편적인 보건인력정책임
- 새로운 보건의료 직종이 도입되면 양성에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되는 의사 인력 공급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됨. 국민의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 요구를 비용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게 될 것임
- 고령화, 의과학 기술의 발전, 질병 패턴의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보건체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음
- PA 합법화,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s), 검안사(Optometrists), 청능사(Audiologists) 등의 우선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제4.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PA 합법화

- 의사 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불법 PA(Physician Assitant) 운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불법 PA 문제는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치부이자 후진적 관행이므로 즉각 개선이 요구됨
 - 대안1 : 의사 수를 대폭 증가시켜 PA 운용 필요성 없애고 PA 운용관행 불식
 - 대안2 : PA 직종을 정식 보건인력으로 합법화하고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수립
- PA 합법화(대안2)가 합리적 대안
 - PA 양성/운용으로 의사 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
 - 정형화된 단순 반복적 의료행위를 PA가 처리하게 되면 의사는 더욱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보건인력의 효율적 협업이 가능
- 의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직능을 부여하고, PA 정원에 연동하여 의사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과제5.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 혁신

- 간병비 부담 획기적 완화
 -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요양시설 방문간호 확대
 - 간호홈 도입
-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재난의료비 보장 강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 혁신
 -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전면 실행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적극적 급여 전환
- 혼합진료금지제도 도입 적극 검토



건강보험 가입자 총진료비(103.3조원, 100%)		
급여 (86.6조원, 83.9%)		비급여 (16.6조원, 16.1%)
공단부담 (66.3조원, 64.2%)	법정부담 (20.3조원,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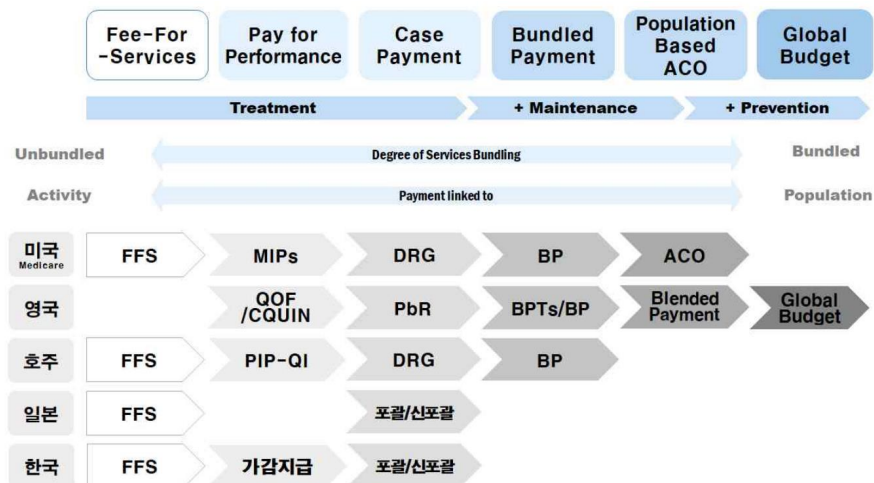
과제6. 상병수당 도입

-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건강보장 급여
- 현재 세계 163개국,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운영
- 질환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하고 조기 직장복귀에 따른 건강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 및 향후 발생할 새로운 감염병 등에 대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상병수당의 도입이 요구됨
- 제도 대상자 범위, 보장 방식, 보장 수준, 보장 기간 등 제도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임



과제7. 보수지불제도 개혁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출관리 개혁의 핵심은 보수지불제도의 개편
- 행위별수가제(FFS)의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비용절감 유인을 갖는 대안적 보수지불제도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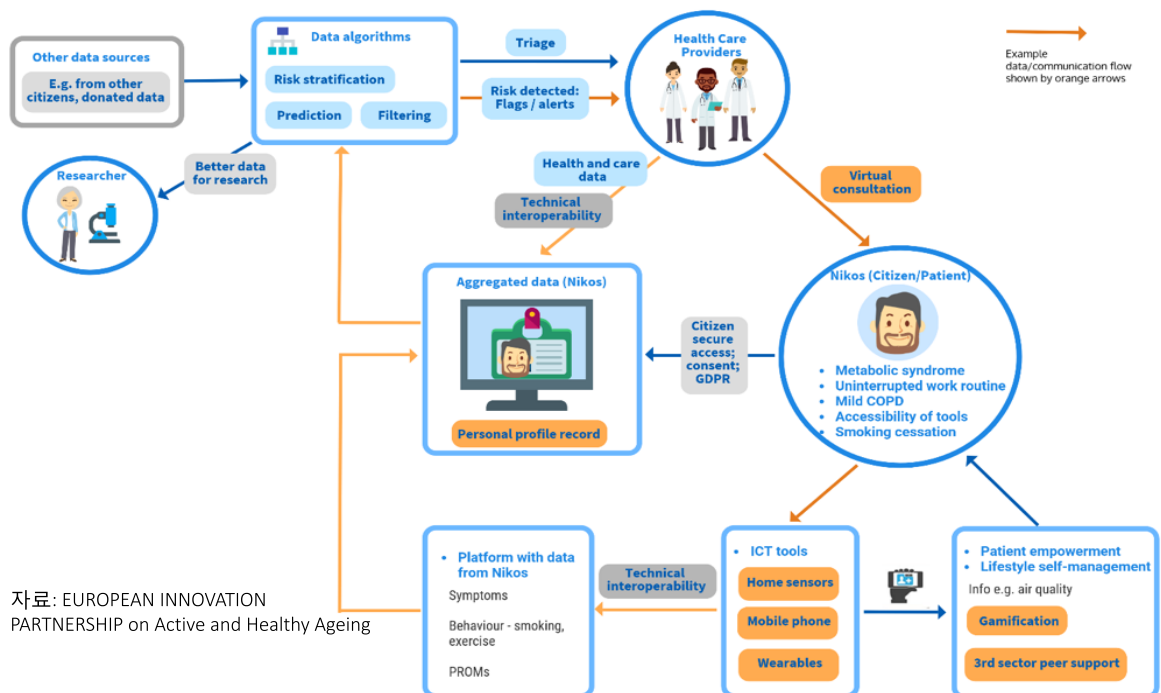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과제8.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 건강보험 보험료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 전체 실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안정적 보험재정 확충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 가입자간 형평성 실현으로 수용성 확대
- 담배, 주류, 설탕, 정크푸드 등에 대한 건강세 확대 또는 부과 검토
-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확보방안 검토
 - OECD 평균 소비세율 19.3%

과제9. 개인건강정보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활용



과제 0.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부 투자 및 정책지원 강화
- 획기적 투자와 R&D 인프라 강화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통한 보건안보 확보



과제 10. 국가보건시스템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 국회, 정부, 노동/사회단체, 지역단체, 전문가 그룹을 망라하는 협의체 구성
- 주요 혁신과제에 관한 정책 대안 및 실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이해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별로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운용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고용 • 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차기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

목 차

1. 2030 청년 일자리 개혁
2. 여성 인력 일자리 개혁
3. 고령 인력 일자리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방안
5.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복지정책으로부터 일자리정책으로의 중심이동
(From Welfare to Work)

- ✓ 돈을 쥐어주는 정부보다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제· 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기대함.
- ✓ 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 (Opportunities to Work)'을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함.

고용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정책

저출산 중소기업 인력난 저성장 초고령사회
청년실업 정·비정규직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생애 주기별 일자리 개혁 정책>

	학습기	취업 준비기	취업 상반기	취업 하반기	(정년) 퇴직기
	~ 20세/25세	20/25세 ~ 30세	31세 ~ 35세	35세 ~ 50세	50세 ~
1. 청년 (2030세대)	일할 기회 및 일의 가치,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2.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경력단절 여성의 재 취업	
3. 고령 인력				유연-안정성 고용모델	정년 및 고용 연장
4. 비정규직 근로자	동일 기업 내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				
5.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액수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구조 개선				

<주: 해당 영역별 시대 구분은 발표자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2030 청년 일자리 개혁

❖ 과도한 대학진학율과 낮은 청년 고용율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 1990년 27.1%에서 2020년 72.5%로 증가함. 대학졸업자 취업율 67.7% (2018년)임.
- 2020년 25세~34세 OECD국가 평균 대학 이수율은 45.5%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 이수율 69.8%로 OECD국가 중 제일 높음.
- 15세~24세 고용율은 OECD 상위 13개국은 53.6% 인 반면, 우리나라는 23.1%임.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 학력별 취업 미스매치 현황(15-29세)

구분	일자리 수	졸업자수	미스매칭	비고
대졸 이상	115만 2천개	215만 4천명	100만 2천명	공급초과(+)
고졸 ~ 중졸	244만 7천개	165만 5천명	-79만 2천명	공급부족(-)
중졸 이하	31만 5천개	10만 5천명	-21만 명	공급부족(-)

* 출처: 노사정위원회 세대간 상생위원회, 2012

1. 2030 청년 일자리 개혁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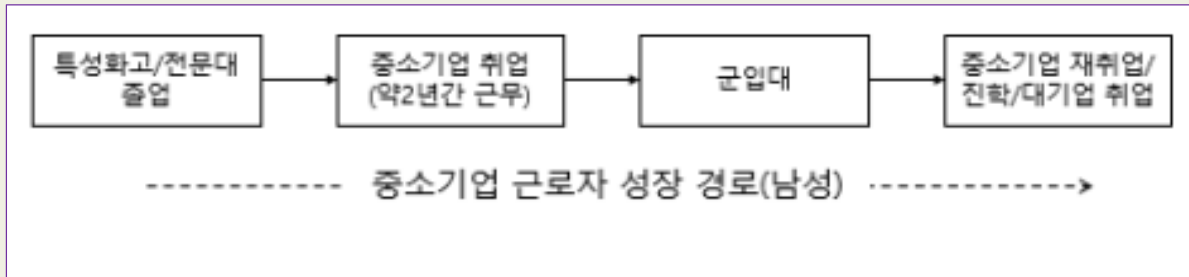
숙련 불일치	기대 불일치	정보 불일치	지역 불일치
학교교육과정과 기업의 필요 지식 및 기술의 차이	근로조건, 임금, 복지, 경력개발 수준	일자리 정보의 불균형, 일자리 정보의 불완전	연고지 중심의 취업활동 행태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 ❖ 숙련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 기대 불일치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전략
- ❖ 정보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 지역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업공단과 도시와의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

1. 2030 청년 일자리 개혁

❖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생의 성장 경로 지원 제도



<출처 : 이지만 외 (2018),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방안 연구용역”, 중소기업진흥공단.

- ❖ 특성화 고등을 졸업 후 군 입대 전 약 2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함. 중소기업의 경우 2년 후 군 입대할 인력에게 핵심 업무 부여 및 교육 훈련을 기피함.
- ❖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생활 과정에서 다수의 대학생을 접한 후, 군 필 후 대학 진학을 고민하게 됨.
- ❖ 군 제대 후, 입대 전 취업한 중소기업에 복귀 및 재 취업하는 사례가 매우 낮음.

2. 여성 인력 일자리 개혁

- ❖ 2020년 남성의 고용율은 69.8%인 반면, 여성의 고용율은 50.7%로 19.1% 차이가 있음. (여성가족부, 2021)
- ❖ 여성 연령대별 고용율은 20대 후반 (68.7%), 30대 초반 (64.5%), 40대 초반 (61.4%), 50대 초반 (65.5%)임. (여성가족부, 2021)
- ❖ 여성 고용율의 M자형 곡선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M자형 고용율 곡선은 유지되고 있음.

- ❖ 2020년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약 36%이며, 이중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45% 인 반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29.4%이며,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40~50대가 가장 높음.
- ❖ 경력단절 후 여성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음.

- ❖ 현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은 매우 부족함.
- 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 구직, 직업훈련, 인턴십, 창업지원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등을 상담하고 있음.

2. 여성 인력 일자리 개혁

❖ 경력단절 여성의 재 취업 정책에 앞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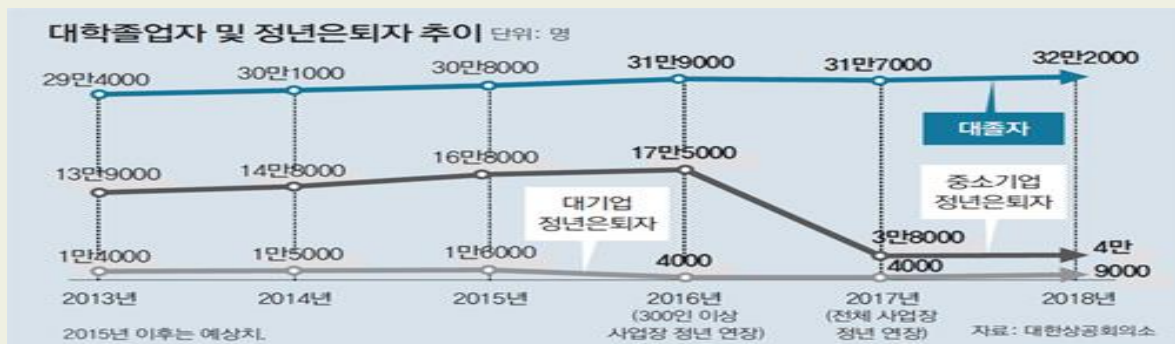
➤ 출산 및 육아 정책의 획기적 개편이 필요함.

✓ 출산 및 육아 휴가의 확대

✓ 육아기 동안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이전 까지) 근로시간 단축
'출근 1시간 늦게, 퇴근 1시간 일찍'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3. 고령 인력 일자리 개혁

❖ 2016년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60세 연장 실행으로 인하여 '청년일자리와 고령 인력 일자리 간의 상충 효과' 발생함.



- ❖ 정년 60세 법안이 실행된 2016년 대기업의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임을 감안하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하여 5년간 더 재직하게 됨.
- ❖ 연간 약 1만 2000명의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됨. 국가 경제 및 기업 경영의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총량'의 관점에서 신규 채용을 기피함.
5년간 총 6만개 (12,000개 * 5년)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짐.
- ❖ 호봉제 임금체계로 인하여 은퇴 시점의 임금이 초봉의 임금의 3배임을 감안하면 '인건비 총액'의 관점에서 5년간 총 18만개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비용이 발생함

3. 고령 인력 일자리 개혁

고령인력 일자리 정책 : '고용'과 '복지'의 혼합모델

가. 先 임금체계 개편 後 정년연장

❖ 정년 60세 입법화 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세 의무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조항이 있음.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은 실행되지 않았음.

- 계속고용/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하기 전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 현재에도 정년 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부당해고 관련 이익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만약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 65세가 입법화 되면 부당해고관련 이익분쟁은 더욱 더 증가할 것임.

3. 고령 인력 일자리 개혁

나. 고령인력의 '임금과 연금의 결합된 소득 보존' 정책

- ❖ 계속고용 65세의 안착을 위한 임금과 연금의 결합된 소득보존 방안
- 아래의 일본 기업 사례는 55세의 임금을 정점으로 56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조정하며 퇴직금은 56세 ~ 60세 사이에 정산을 한다.
 - 예를 들어, 56세 ~ 60세 사이의 임금 조정 폭이 56세 시점의 80%로 감소한 반면, 61세 ~ 65세 사이의 임금 증정폭은 56세 시점의 50%로 감소한다.
 - 61세 ~ 65세 사이의 감소된 임금·일시금은 공적 부급과 기업연금으로 의하여 일정부분 보존된다. 65세에서 회사를 퇴직할 때는 61세~65세 사이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형태의 공로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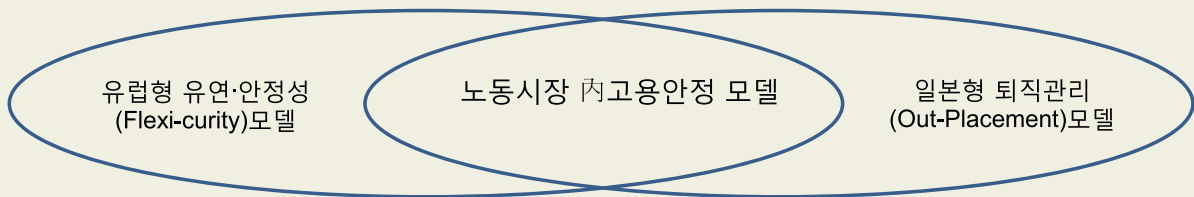
<일본의 임금과 공적연금의 혼합을 통한 소득 보존 모델>



3. 고령 인력 일자리 개혁

(고령 인력을 위한)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제도 실행

- ❖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고령인력을 위한 퇴직관리 시스템 및 유연안정성 제도 실행이 필요함.
- ❖ ‘한 직장’에서의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성 혹은 ‘노동시장내’에서의 고용안정성 추구 제도개선이 필요함.



- ❖ 주된 일자리에서 다음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 우리나라에의 적합 모델 : 유럽의 **정부 주도의 유연·안정성 (Flexi-curity)** 모델과 일본의 **기업 주도의 유연·안정성 (Out-placement)**모델의 결합 모델

13

4.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방안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간의 관계

-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차별적 처우’의 적용 범위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차별, 부당한 대우, 차이간의 특성>

	차별 (Discrimination)	부당한/불합리한 대우 (Unfairness)	차이 (Difference)
특성	✓ 신분/귀속적 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경우 ✓ 예를 들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 차이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경우	✓ 능력 및 역량, 그리고 결과/성과에 따라 다르게 대우 받는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14

4.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 방안>

❖ 비정규근로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불합리한 격차인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불합리한 격차’ 해소 방안

- 두가지 고용형태 근로자 간의 상이한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서는 상이한 임금이 지불은 차이에 해당하는 요인임.
- 그러나, 능력과 성과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반면, 비 정규직 근로자는 상이한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 상이한 두개의 사업장의 경우, 지불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적용 가능함.

15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 최저임금 증가 및 기타 경제 지표 추이 (2014년 ~ 2022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중위임금값 비중
2014년	3.2%	1.3%	7.2%	5,210원	1,088,890원	45.8%
2015년	2.8%	0.7%	7.1%	5,580원	1,166,220원	48.5%
2016년	2.9%	1.0%	8.1%	6,030원	1,260,270원	50.4%
2017년	3.2%	1.9%	7.3%	6,470원	1,352,230원	52.8%
2018년	2.9%	1.5%	16.4%	7,530원	1,573,770원	58.5%
2019년	2.2%	0.4%	10.9%	8,350원	1,745,150원	62.6%
2020년	-0.9%	0.5%	2.9%	8,590원	1,795,310원	
2021년			1.5%	8,720원	1,822,480원	
2022년			5.1%	9,160원	1,914,440원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OECD;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16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2018년~2019년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의 영향

1. 최저임금 미만율의 증가 :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4년 12.0%, 2015년 11.4%, 2016년 13.5%, 2017년 13.3%, 그리고 2018년 15.5%와 2019년 16.5%로 크게 상승하였다.

2. 최저임금 영향률의 증가 : 2014년 14.5%, 2015년 14.6%, 2016년 18.2%, 2017년 17.4%, 그리고 최저임금 16.4%와 10.9%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에는 23.6%과 25%(약 500만명)로 증가하였다.

3. 소득분배의 악화 : 2018년~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장소득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0.88, 2017년 11.27, 2018년 11.15, 그리고 2019년 11.56으로 악화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재인용)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4. 임금 격차 해소 : 저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자) 비중이 2017년 22.3%, 2018년 19.0%, 그리고 2019년 17.%로 감소하였으며, 임금 5분위 배율 (상위 20% 평균 임금/하위 20% 평균임금)의 경우 역시 2017년 5.06, 2018년 4.67, 그리고 2019년 4.50으로 감소하였다 (근로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1) 재인용).

➤ 그러나 위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감소 통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저임금 근로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율의 ‘하후상박’ 현상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5. 일자리 감소 효과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15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는 감소시킨 반면 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를 증가시킴.

- 이와 같은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시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소위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양산된 결과임.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

1. 최저임금제도로써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함.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지불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이 고용을 축소한다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됨

저임금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해결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힘든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연동된 제도를 실행함.

근로장려세제는 현금성 지원 사회보장과는 달리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한 방안임.

5.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2.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구조 개선 :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의결위원회’로 이원화 된 ‘최저임금심의·의결 구조’로 변경이 필요함.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최저임금 의결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 범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함.
- 위와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최저임금 의결위원회’와 같은 이원화된 최저임금 심의·의결 구조하에서는 2018년 발생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따르지 않는 의결과 2019년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21

감사합니다

22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교 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 교육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양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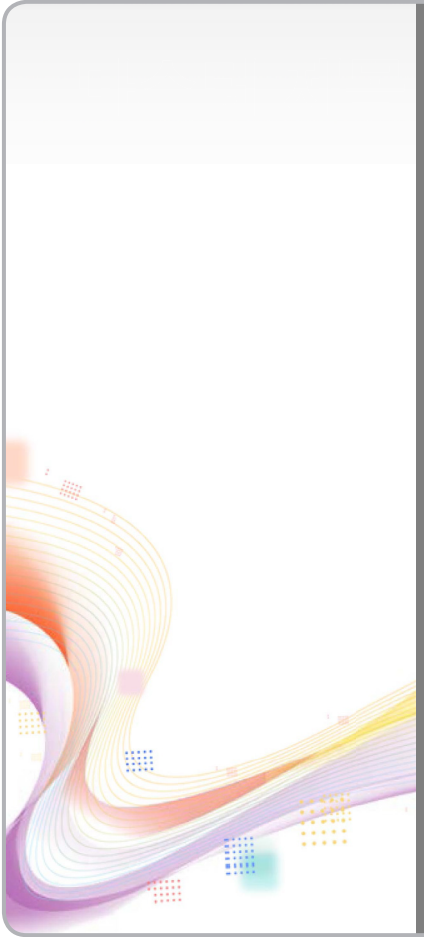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교수

CONTENTS

0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0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01 기로에 선 한국교육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1

수능 D-Day...!,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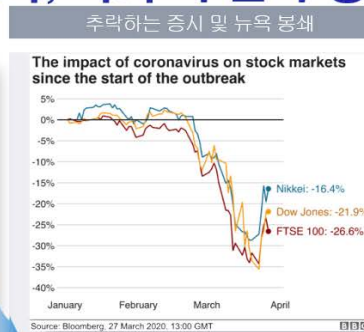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 현실은...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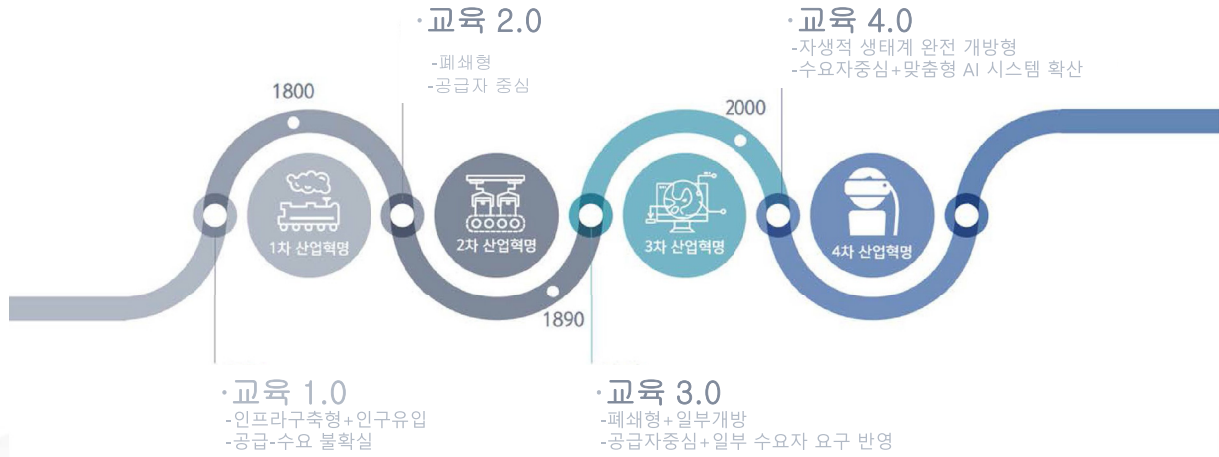
코로나, 사회 각 분야 영향권!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4

With 코로나, 이제 교육도 진화+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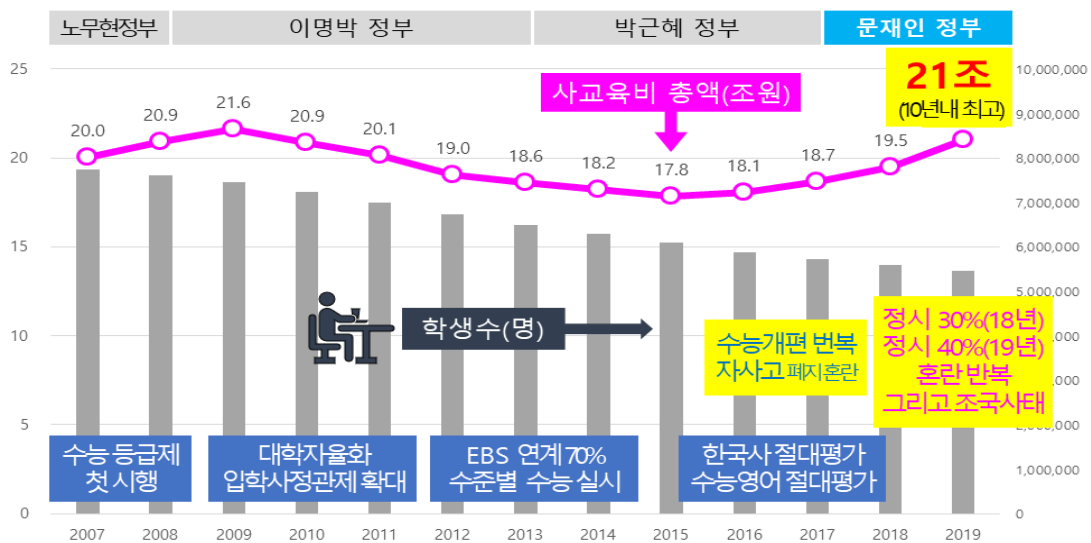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5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로 “에듀푸어”를 양산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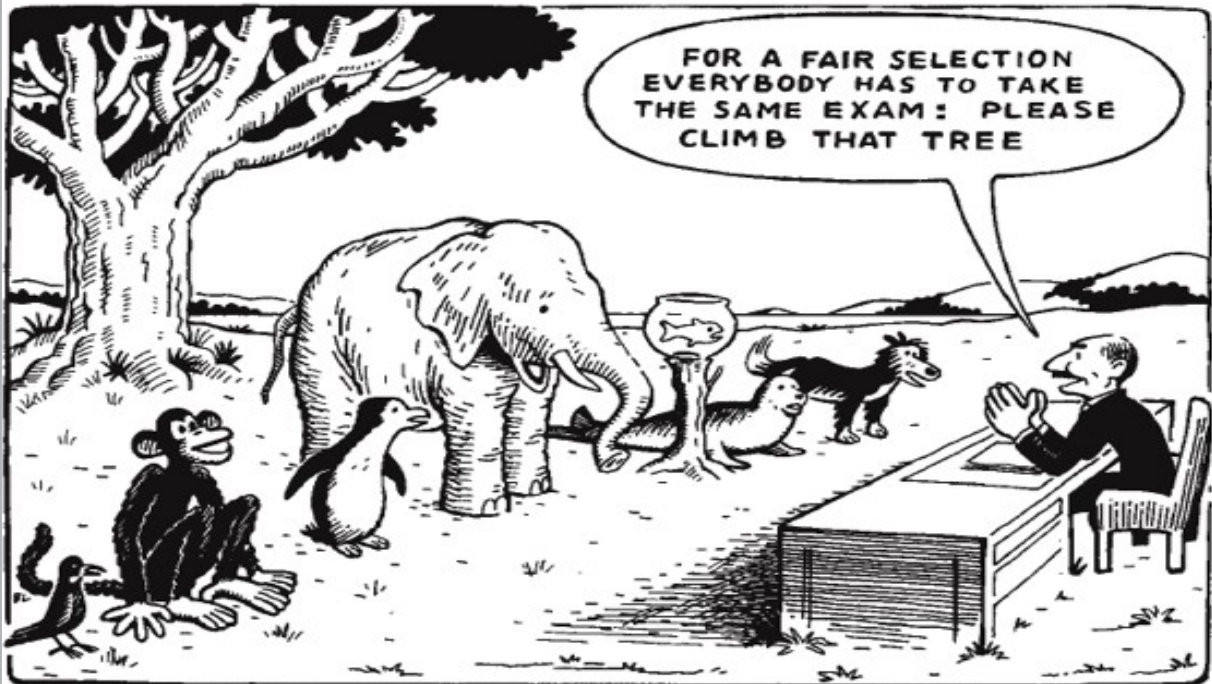
사교육비 역대 정부별 추이 및 주요 입시정책 변화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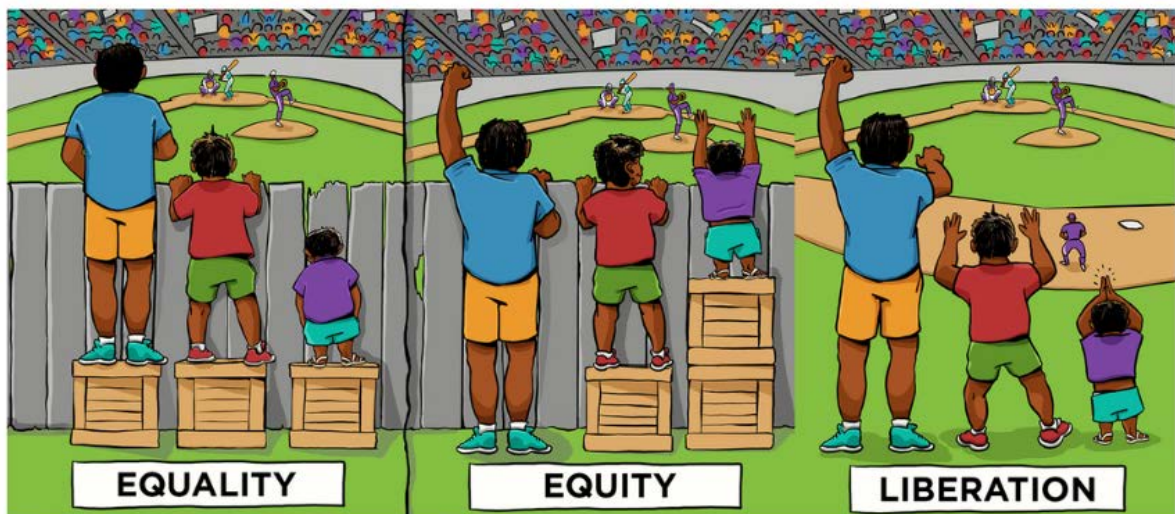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 평등의 오류 및 현실은...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7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 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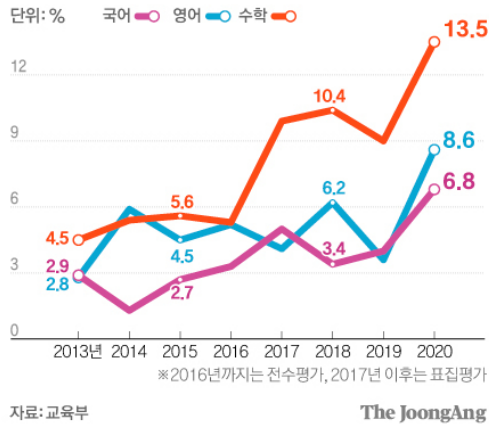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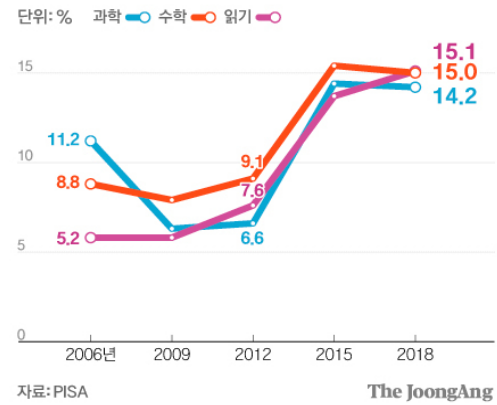
08

코로나속 학력격차... 더욱 확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고2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만 15세 2 수준 미만 학생 비율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09

예상 가능? 미래... 코로나의 역습... 그리고 교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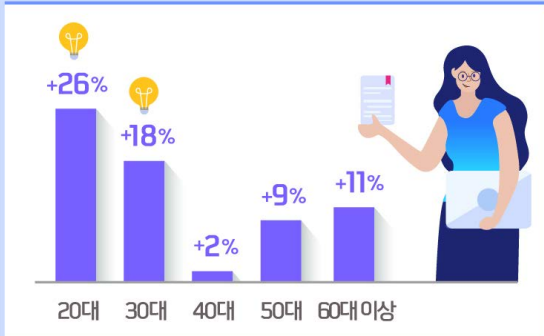


1. 기로에 선 한국교육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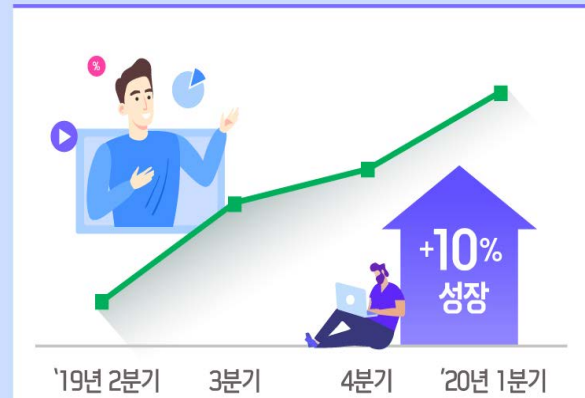
코로나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변화되는 교육

연령대별 청소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용 고객 수 증감률



* '19년 vs '20년, 각 연도 1분기
** 청소년 인터넷 강의 사이트 7곳 대상

청소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용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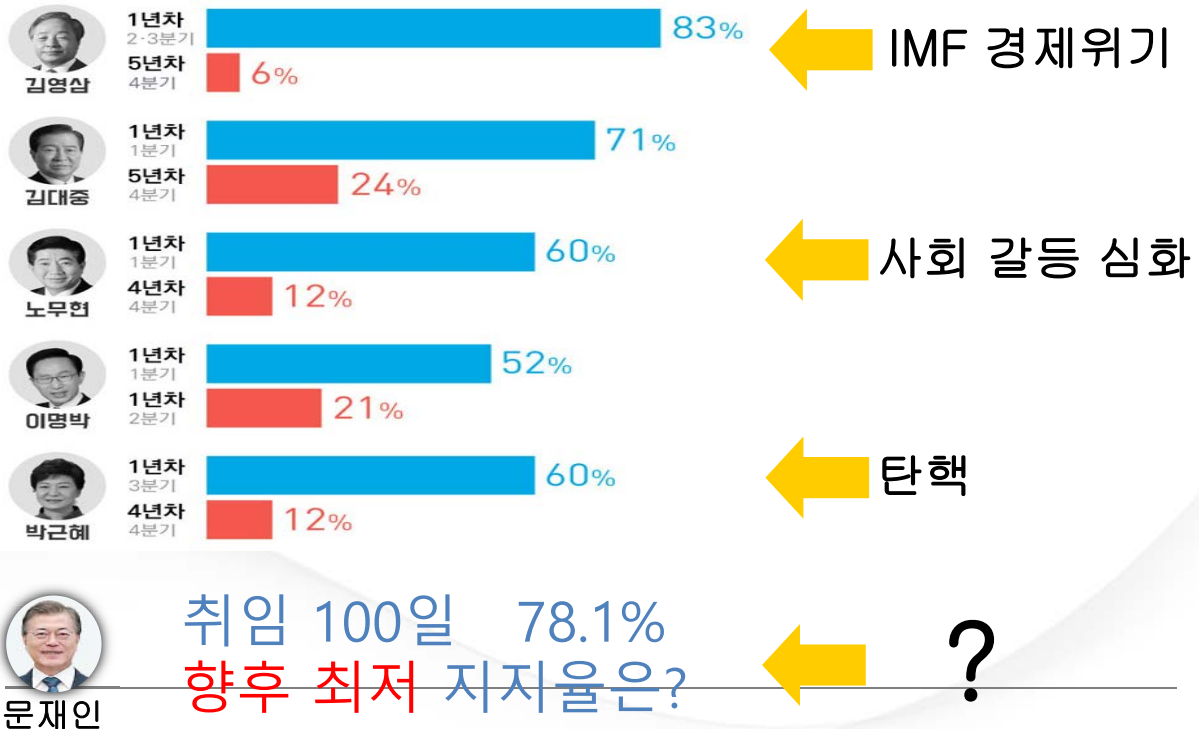


0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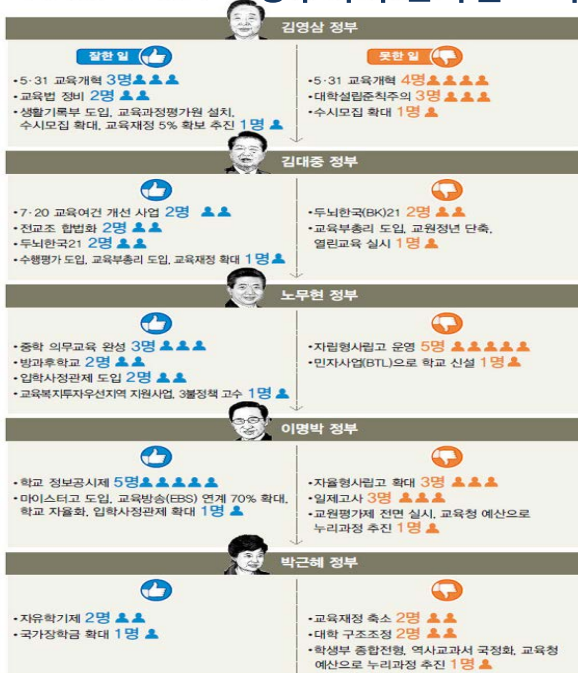
역대 최고, 최저 지지율... 결과는?
높은 지지율과 정부 성공 상관관계는 거의 0%!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2

정부마다 반복된 교육개혁, 문제는 늘 그대로



입시 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 교육개혁

지식혁명의 주도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희망의 교육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

문재인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3

노무현 정부 vs. 문재인 정부, 닮은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교육·시험 [설곳없는 NEIS] 贊·反측 모두 반발...

참고문헌

입력 : 2003/05/30 19:05 | 수정 : 2003/05/30 19:05

국교육·6개월 후 시행' 발언에 반교조 발끈
교종도·6월 대규모 집회·연가등경 강행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지난 26일 '현안 재검토'를 발표한 교육부(尹慶喜) 교육부총리가 불과 이틀 만에 '6개월 후 NEIS 시행'으로 발표 내용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하면서, NEIS 사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NEIS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기미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NEIS 갈등(2003)

• 자사고·외고폐지 논란(2017)
• 교원 임용 갈등(2017)

• 수능 등급제(2004)
• 07년 수능 대혼란!

• 수능 절대평가(2017)
• 2020, 22년 수능 대혼란?



修能 점수 없애고 9등급제로...現 中3부터 적용

입력 2004-08-26 18:23 수정 2009-10-09 16:16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또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막기 위해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없애고 9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고교의 학생부 성적도 '수 우 미 양 가'로 적는 평어(評語)와 석자순위를 폐지하는 대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수능저렴 9등급화한 석자가 제시된다.

주도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4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세부 6대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 기초학력 보장 및 1수업 2교사제 •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미래사회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 대입제도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강화 •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 전문대 질 획기적 제고 •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교육민주주의 회복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기능 개편 • 단위학교 자치 강화 •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5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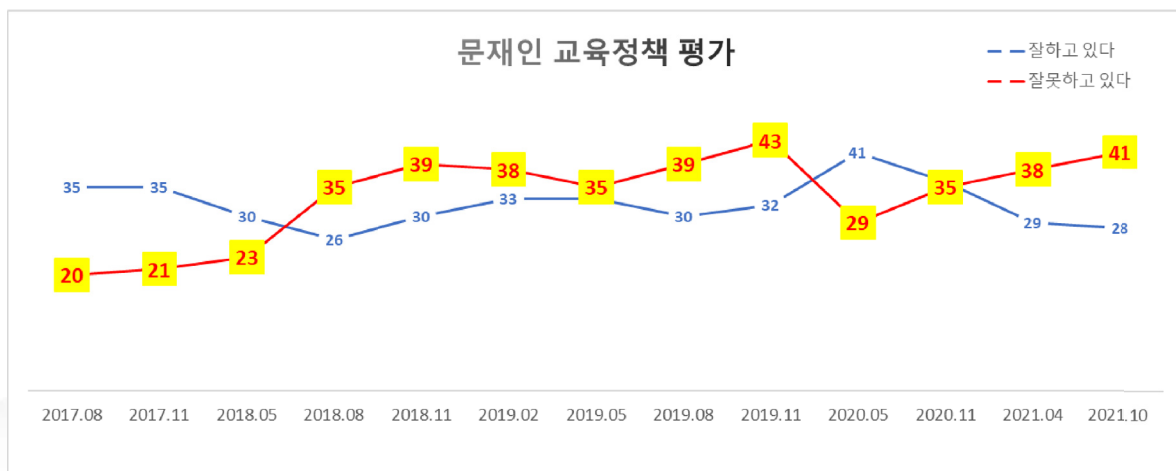
- ❖ 무상교육 확대
- ❖ 수능 절대평가 및 대입전형 단순화
- ❖ 자사고, 외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 ❖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추진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 정치참여 허용

실험,
갈등,
혼란,
결과는?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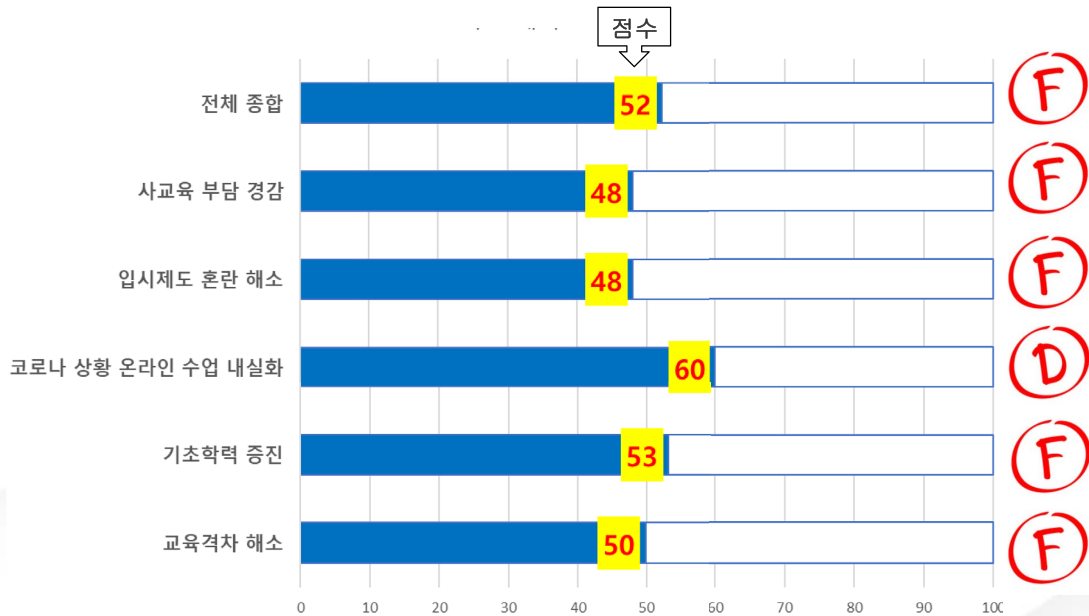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 41% 부정 압도
(한국 갤럽 정기조사)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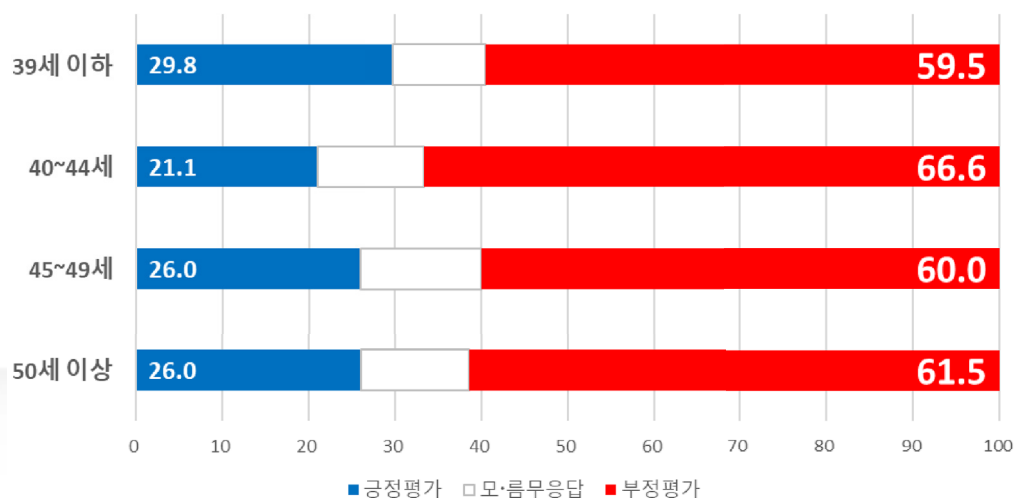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세부 평가, **F학점 낙제수준**
(성균관대-한국 갤럽조사 최초 대규모조사 서울지역 학부모 조사)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8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연령별 평가, **부정평가 압도적**
(성균관대-한국 갤럽조사 최초 대규모조사 서울지역 학부모 조사)



2. 변화 파도속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혼란

19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5년 내내 오락가락! 친정부 그룹조차 비판

매일경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4년 회고 "교육격차 해소 미흡했다" 시인

| 교육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세계일보

서울경제

文정부 교육정책 표심 따라 '오락가락' 文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오락가락

朝鮮日報

고교학점제 불쑥 앞당겨... 文정부 4년 내내 교육정책 뒤집기

[고교학점제 쇼크]

한겨레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는 '따뜻한 아이스크림'처럼 모순

0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0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 -> 기초, 인권, 지속 삼박자로!

❖ 제1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s)

- 학교의 존재이유 확인, 학력향상, 교육기본 원칙 재확립
-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 합의 도출후 학부모 신뢰 확보

❖ 제2 원칙: 기초학력, 교육복지도 인권이다

- 기초학력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젠 인권으로 접근
- 학력격차 = 교육/학습인권 격차 방치, 교육복지격차 = 기본인권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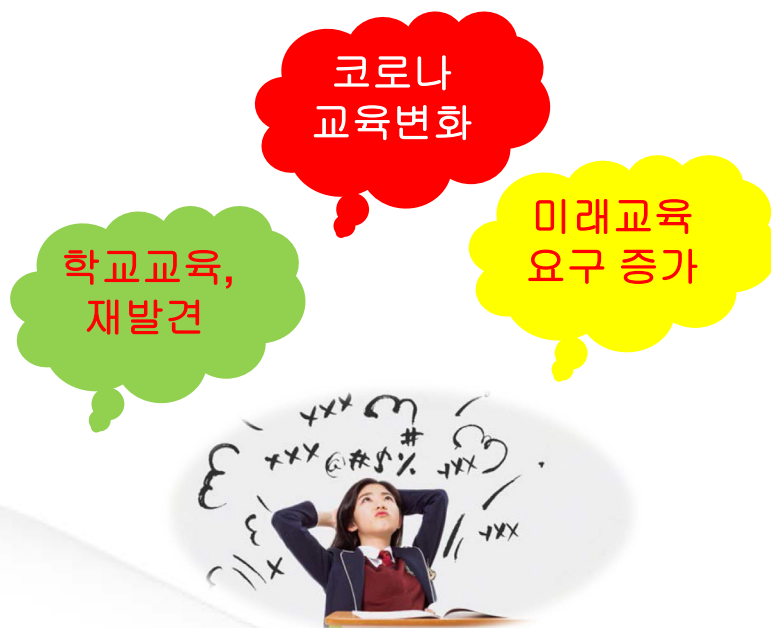
❖ 제3 원칙: 일회성이 아닌 예측가능 시스템 구축하라

-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 즉흥적 상황모면용 발표뿐인 정책 지양
- 미래교육 예측가능한 시스템 도입해 책무성 강화 필요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1

차기정부 미래교육 -> 교육기본 다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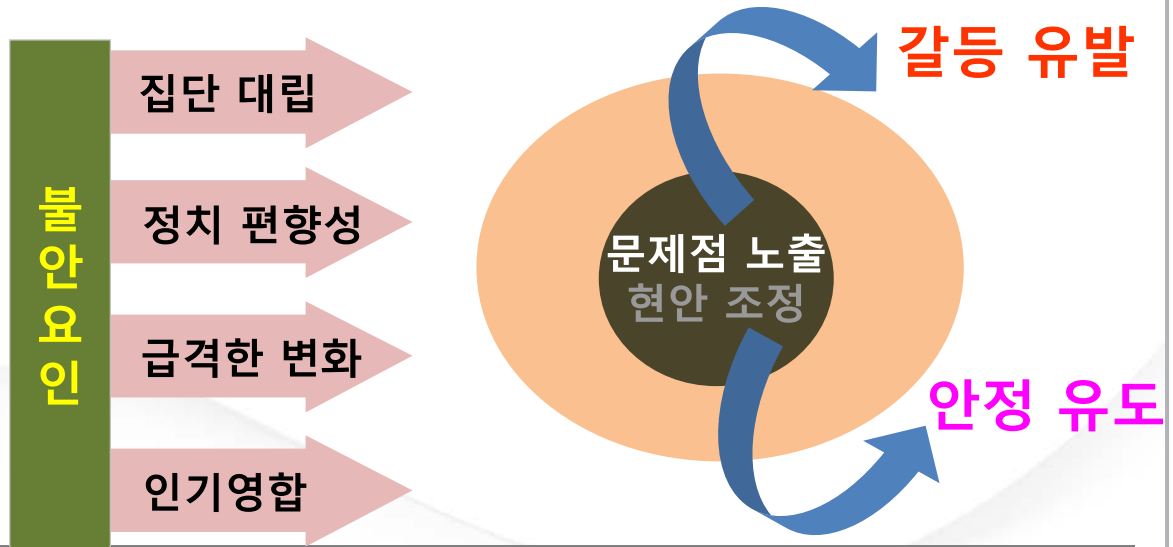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2

교육정책 목표, 다시 보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재음미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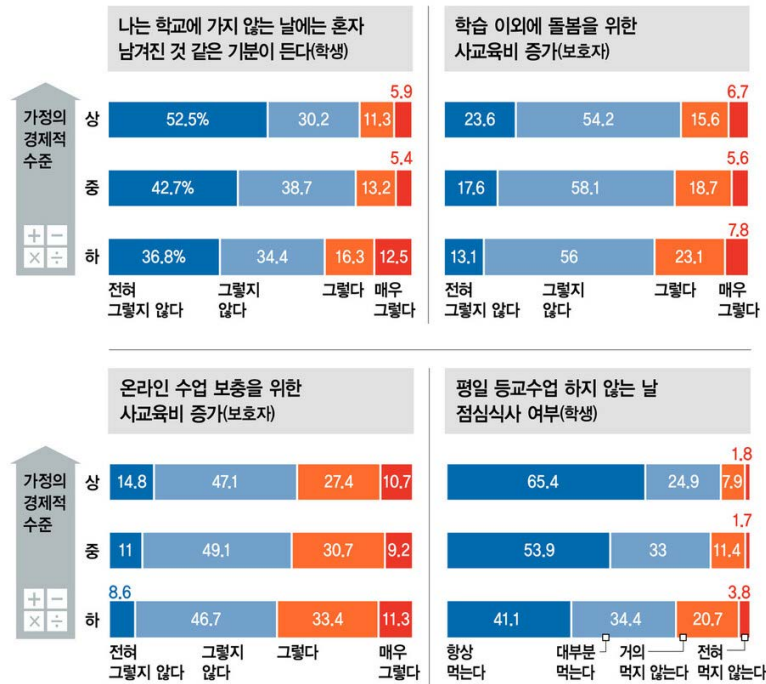
현재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5년후 반복? ‘척’, ‘것처럼’ 정부 안돼야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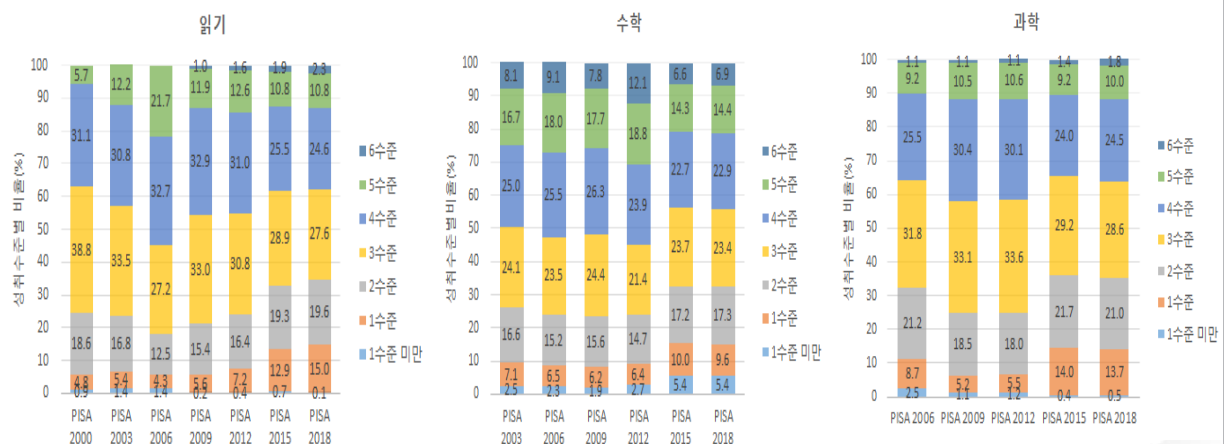
코로나 대응 학교실패, 결국 사교육으로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5

20년간의 학력격차 확대, 알면서 모른체?



학력격차 해소, 교육부 의지있나?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내용

기초학력보장

- 2022년까지 초·중·고 학생 1/3 이상 203만명* 대상 교과 보충 특별 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 지원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맞춤형 학습지원

- 학습·심리 복합지원 두드림학교 6,000개교로 확대
- 초등학교 1수업 2교사 등 협력수업 운영학교 2,200개교로 확대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계획

2021년 2학기	2022~2024년	2025년 ~
특별교실 전환 967교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있는 학교	학령인구 감소, 재정 소요 등 고려해
모듈러 교사 91교	신증·축 집중 추진	단계적 감축 추진
학급 증축 61교		
복합 추진* 36교		
총 1,155교		

*특별교실 전환 + 모듈러 교실 또는 수평 증축, 수평+수직 증축 등

자료/ 교육부

장예진 기자 / 20210729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학력향상
학력격차 해소,

어떻게?

학력향상
학력격차 해소,

가능성은?

학력격차 해소, 우문현답, 현장에 '정답' 있다!

진단 없는 처방에 두 번 우는 학교 현장

초등학교

"일부 교육단체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조차 줄 세우기라고 반발. 예전엔 기초학력 미달 현황도 위에 보고해야 했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 (서울)

"교육감들이 나서서 선생님한테 초1 받아쓰기, 일기쓰기 다 금지시켜. 선생님들이야 그냥 '편하네? 안 하고 말지' 하는 것." (인천)

"학교나 교사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협력교사 배치. 막상 보니 같은 반에서 수업하기 쉽지 않음." (경기)

"가족이나 과밀학급에 협력교사까지 오니 더 정신없어. 교장까지 하고 퇴직하신 분이 협력교사로 뒤에 서 계시니 매 수업이 공개수업처럼 느껴지기도." (경기)

"기초학력은 답이 뚜렷한 개별교육 해야만 잡을 수 있음. 기간제로 단기 처방해 될 일이 아님." (강원)



중학교

"시도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가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 코로나19 터지고는 손놓은 곳 많아." (인천)

"초1부터 중1까지 계속 시험 없으니 학력 점검 기회 자체가 없어. 교사들은 아무 평가기록 없이 중2를 받는 것." (인천)

"학교에 남아 공부시키려 해도 본인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에게 강제권 없어." (경기)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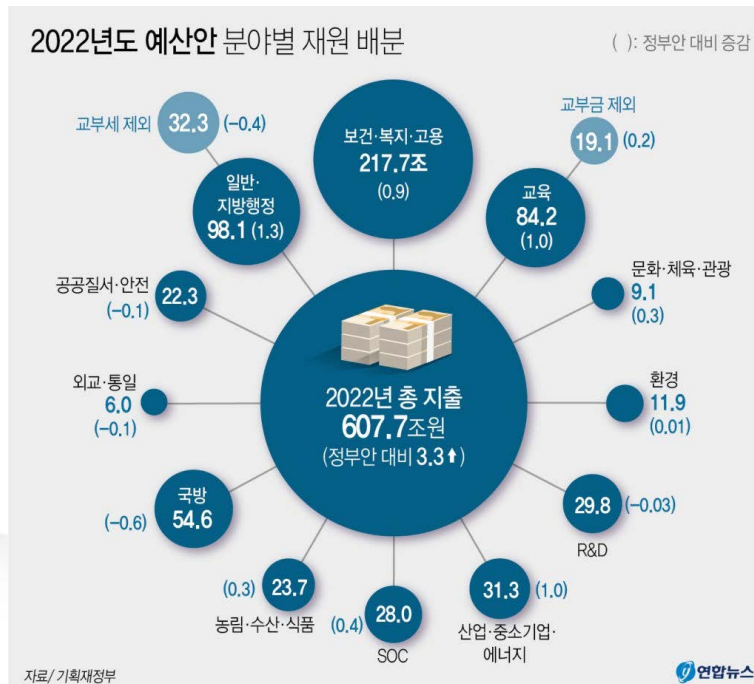
"기초학력 진단을 하면 반별, 학교별, 지역별 격차 드러나. 그럼 결국 교육청과 교육부의 숙제가 되니 다들 하기 싫은 것." (서울)

"현행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체가 주먹구구식. 체계도 없고 학교별로 각자 하니 결과가 나와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인정을 안 해." (경기)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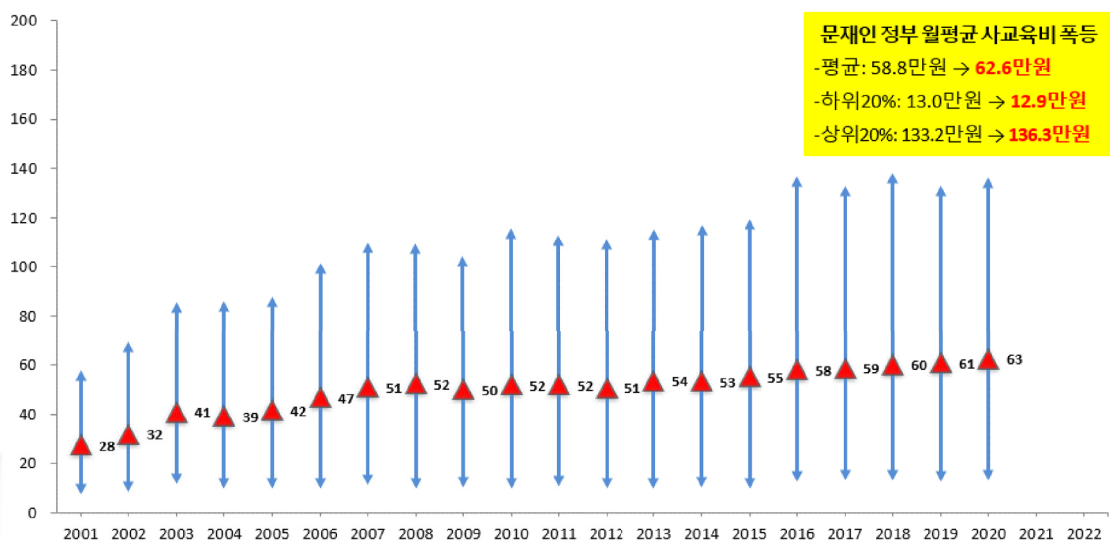
차기 정부, 교육 예산은 어디로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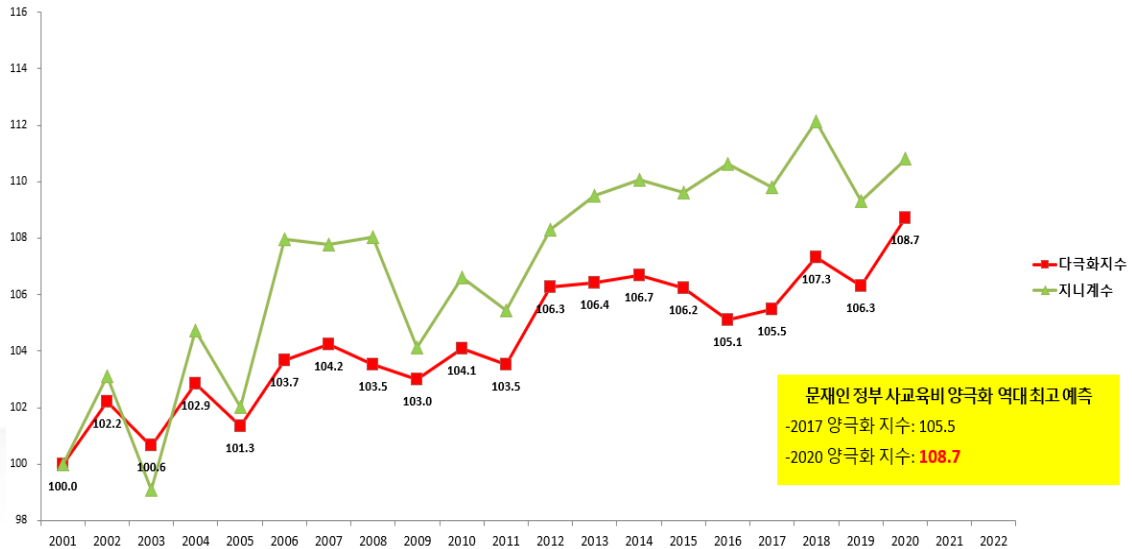
사교육비 양극화, 연도별 가구당 상위 20%와 하위 20% 사교육비 분포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0

사교육비 양극화,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 비율 추이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1

내로남불, 내 자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남의 자식은?!

'내로남불' 말 말 말

2018년 9월 5일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2018년 6월 27일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된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7년 7월 20일

"딸이 졸업하고 나서 '외고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격어 보니) 외고·자사고처럼 재능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건 좋지 않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2017년 6월 2일

"청담동 아파트는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에 불과하고, 그날진 1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4년 6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 자식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남의 자식은?!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2

조국 논란, 입시 공정성 논란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주요 허위 스펙 의혹	1심	판단 이유(1심)	2심
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유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유죄
2 동양대 보조연구원	유죄	실제 근무 안해	유죄
3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유죄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해	유죄
4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유죄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해	유죄
5 KIST 인턴	유죄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유죄
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유죄	조씨 실제 인턴 안해,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	유죄
7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유죄	실제 인턴 활동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이 허위 작성	유죄

The JoongAng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비리' 관련 발언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토의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12월 교육부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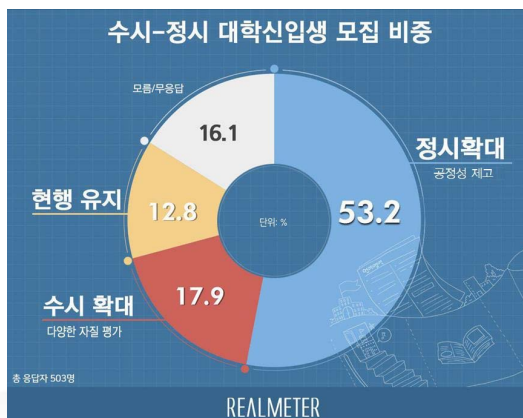
“대학 입시 수시도 위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반칙·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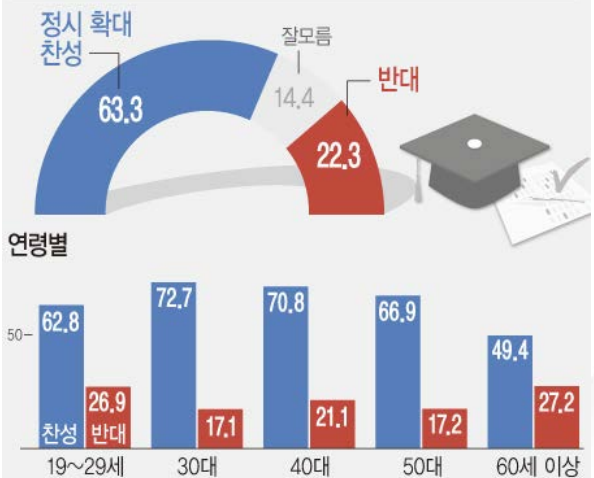
33

조국 사태 이전 2018 vs 조국사태 이후 2019



대입 정시확대에 대한 여론 단위:%

10월25일 CBS 의뢰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1명(7.2% 응답률)/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ARS 혼용/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료: 리얼미터

19.10.28 뉴시스 그래픽 인지해 기자 hokma@newsis.com

NEWSIS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4

누가 당선 되도 정시확대? 여야 입시공약은 아직 “준비중”



- '공정성' 강조,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 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



- '공정성' 강조, 대입시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 입시 비리 신고센터 및 작권조사 강화 '암행어사제' 도입
- '복잡한 대입 제도 단순화, 사교육 의존도 낮출 것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

심상정 “내가 진짜 野후보, 나머지는 민주당이 키워”

김승현 기자

입력 2021.11.16 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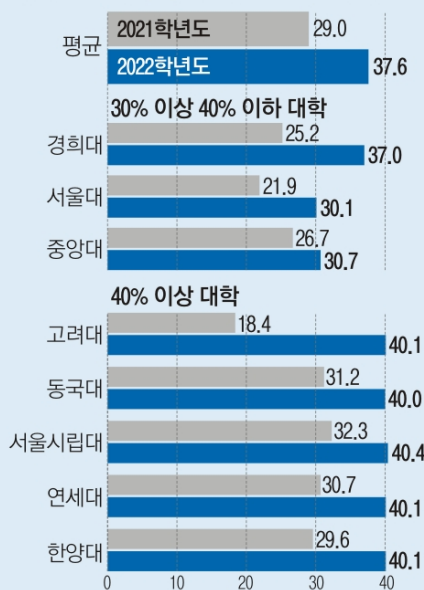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5

수능 중심 정시 비율, 이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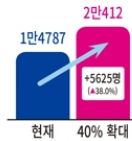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수능전형 확대 권고대상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변화 (단위: 명)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권고한 16개 대학				
모집인원	수능(2021년 현재)	차이	수능 40%	
서울대	3360명	736	+608	1344명
서강대	1720명	570	+118	688명
성균관대	3633명	1280	+326	1454명
경희대	5303명	1336	+786	2122명
동국대	3060명	954	+270	1224명
건국대	3403명	1171	+191	1362명
연세대	3698명	1137	+343	1480명
광운대	1920명	619	+149	768명
숙명여대	2418명	622	+346	968명
한양대	3197명	945	+334	1279명
중앙대	4929명	1315	+657	1972명
고려대	4166명	768	+899	1667명
송실대	3055명	942	+280	1222명
서울여대	1709명	555	+129	684명
서울시립대	1813명	586	+140	726명
한국외대	3629명	1403	+411	1452명



자료: 교육부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6

2022학년도 올해 수능, 출제 잘못?

헤럴드경제 | 4일 전 | 네이버뉴스

역대급 불수능 전망...등급 컷 대폭 하락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가채점 결과로 상된 등급 컷라인(컷)이나 상위권 대학 지원가능 예측 점수가 대폭 하락하고 ..

한국경제TV | 4일 전 | 네이버뉴스

'역대급 불수능' 논란...난이도 조절 실패했나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가채점 결과로 상된 등급 컷라인(컷)이나 상위권 대학 지원가능 예측 점수가 대폭 하락하고 ..

서울경제 | 4일 전 | 네이버뉴스

"체감상 역대급 불수능"...난이도 조절 실패? 코로나 변수?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가채점 결과로 상된 등급 컷라인(컷)이나 상위권 대학 지원가능 예측 점수가 대폭 하락하고 ..

M 매일일보 | 4일 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희대의 불수능' 논란

특히 국어영역에서 고난도 지문과 까다로운 보기 문항들이 출제돼 난도 논란이 일었던 2019학년도 수능에 견줘 '희대의 불수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21일 교...

동아일보

[단독]수능출제위원장 "코로나에 중위권 무너진듯... 수학-국어 쉬웠다"

기사입력 2021.11.23. 오전 3:02 최종수정 2021.11.23. 오전 7:1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4,291

1,885

요약

가

인

공

| "작년과 수준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어렵다는 수험생들 너무 많아 당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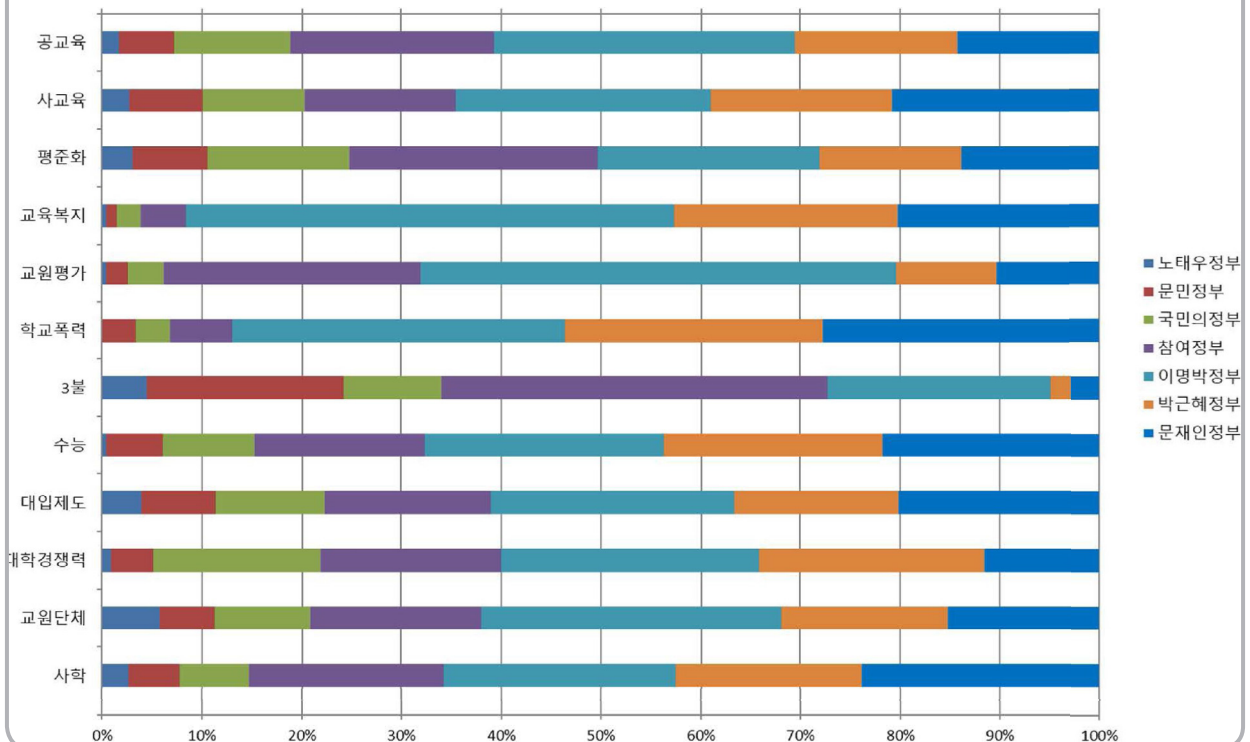


"쉬운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출제진도) 당황스럽습니다."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7

차기 정부, 역시 반복되는 교육현안 연속...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8

차기 정부서 폐지될 정책 1순위, 혼란만 유발

2023년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어떻게 바뀌나

	2022년까지	2023~2024년	2025년 이후	자료=교육부
대상 학년	현 중3~고3	현 중1~2년생이 고교 입학	현 초6 이하 고교 입학	
졸업 기준	204단위	192학점	192학점	
수업 시간 (3년 기준)	2890시간	2720시간	2560시간	
과목 이수 여부 기준	없음	없음	성취율 40% 못 미치면 '1(미이수)'→ 보충 수업	
시간표	학교에서 지정	원하는 과목 골라 시간표 구성	원하는 과목 골라 시간표 구성	
내신 평가	상대평가 (내신 9등급)	상대평가 (내신 9등급)	공통 과목: 상대평가 선택 과목: 절대평가	
수능	현 수능 체제	현 수능 체제	논·서술형 문제 도입 등 개편 (2024년 발표)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39

차기 정부서 폐지될 정책 1순위, 혼란만 유발

바뀌는 교육과정 주요 내용

초등학교	3~6학년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1년)→ 자유학기제(1학기)로 축소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 총 수업 시간 축소 (425시간→ 320시간)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일반선택에서 제외
공통	-전 교과에 '생태 전환 교육' 과 '민주 시민 교육' 강화 -초6·중3·고3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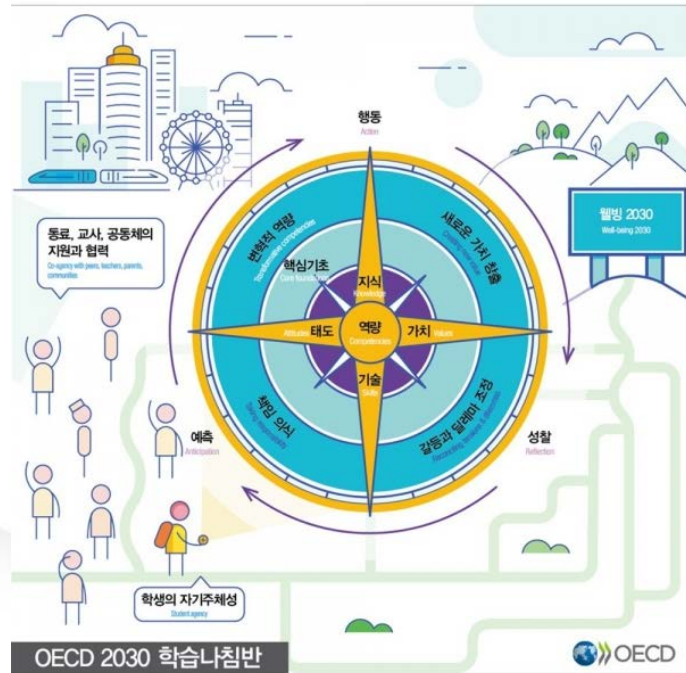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

자료=교육부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40

미래교육 2030 OECD 학습나침반, 새로운 도전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41

미래교육, AI+메타버스+새로운 교육 형태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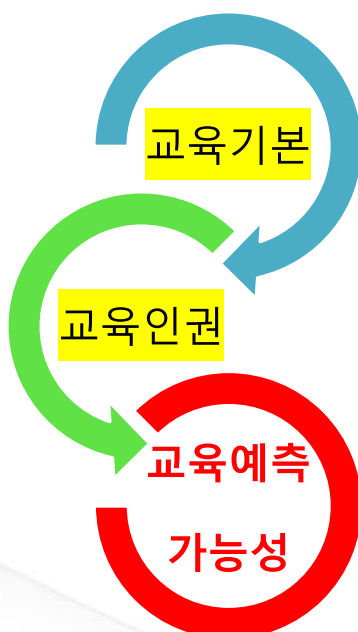
BTS, 오징어게임, K 콘텐츠, 그리고 미래교육의 가능성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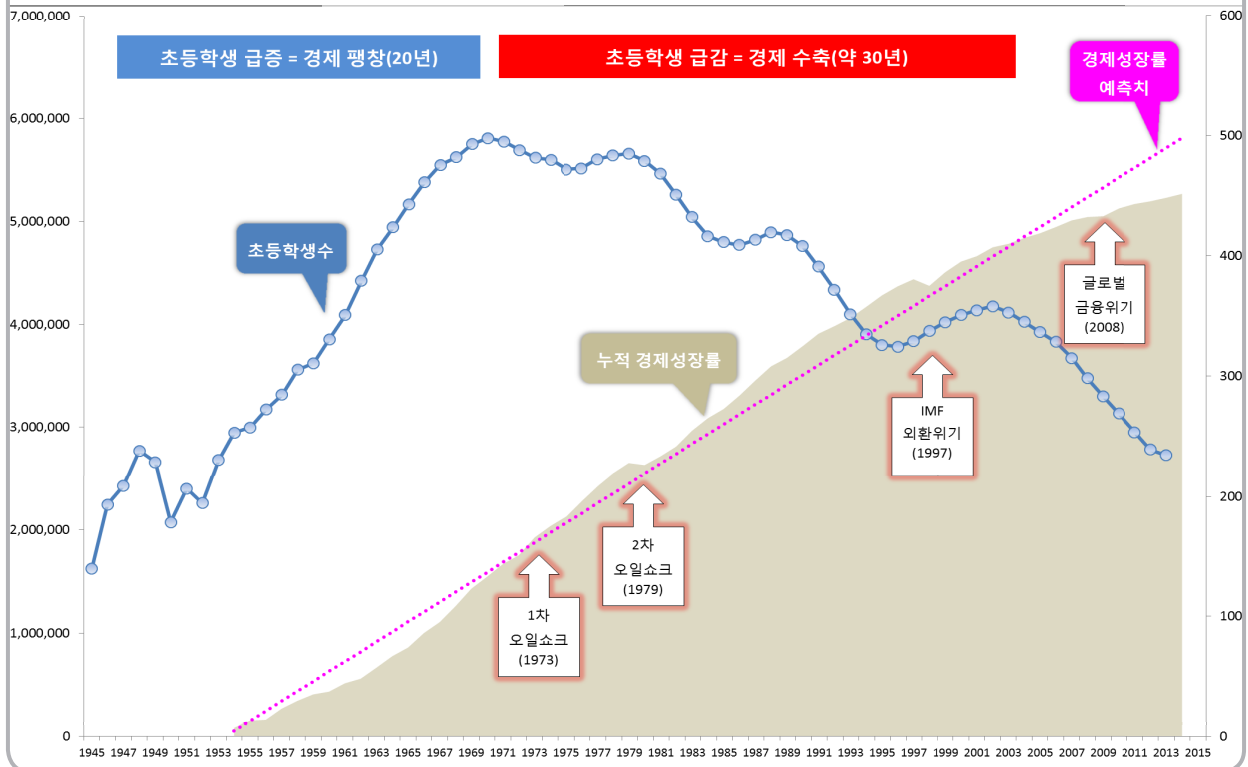
새로운 시도... 차기 정부 미래교육의 길...



3. 차기 정부 교육정책 대응방향

44

미래성장 = 교육에 달려!!



45

교육, 그래도 멀리 보자

- ❖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
- ❖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
- ❖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

THANK YOU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 정책
-주 거(부동산)-

서진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 現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차기 정부에 바란다!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서진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I. 들어가며

1) 주택정책의 의의

- ①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행하는 정책**
- ② 주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행하는 다면적인 정책
 -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 **주택 건설**(임대 주택 포함)
 - 주택자금 융자 및 주택가격(임대 포함)정책 등 **주택금융**의 정비
 - **주택 세제**의 조정, 주택 생산의 합리화, 지대 임대료의 통제
 -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2) 시장실패

- ◇ 부동산 시장은 자율에만 맡기면 **분배왜곡**이 일어나는 등 **시장실패**가 뒤따라 정부가 개입함.
-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본 이유는 **정치적 기능**으로 **사회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혹은 경제적 기능으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함.
- ◇ 정부의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 효율성 등인데, 예로 정부가 그동안 **'1가구 1주택'**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근거한 것임.

3) 주거복지-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수요자	주거실태	지원방안
청년	· 소득은 적고 월세 비중 높아 RIR 높음 (실업률 9.8%, 월세비중 64.3%, RIR 19.5%) · 1인 가구 많고, 쪽방, 고시원 거주 많음 · 전월세 자금 및 공공임대 수요가 많음	· 소형,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실 · 자산형성 및 자금지원 ·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신혼부부	· 주거, 양육 부담으로 혼인, 출산 포기 증가 (출생아수 '95년 71.5만 → '16년 40.6만, 혼인건수 '95년 46.5만 → '16년 28.2만)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수요 많음	· 신혼희망타운 7만호 · 육아 특화형 임대 20만호 · 전용 구입, 전세자금
고령	·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 · 보유자산 대부분이 주택으로 개보수 수요 多, 임차가구는 소득이 적어 공공임대수요 多 (자가점유율 73.4%, RIR 32.6%)	·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5만호 · 보유주택 활용한 지원 ·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의 1.5배 · 지하, 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이 전체의 1.6배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76.7만 가구 · 공공임대, 전세자금, 주거급여 수요가 많음	· 공적임대 41만호 · 주거급여 기능 강화 · 계층별 주거지원사업

II. 현황과 문제점분석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3. 주택시장 추이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1) 정책의 유형

- ☐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 ☐ 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 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 7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① 가격 제한

-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보완 > 대상, 지정요건, 유예 등

② 세제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특례 배제,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 ☐ 공시가격 현실화
- ☐ 부동산 세제의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최종 1주택 보유 날부터 2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최초 거주주택 양도 시 만 비과세(1회)),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5%이하 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 분양권, 입주권도 이월과세 적용

- 8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③ 금융

□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 등 대출규제

- 투기지역 내 주담대 제한 강화 - 다주택자 LTV, DTI, DSR 강화
-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인별>세대별)

□ 대출규제 보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 투기,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매매업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DTI, DSR 강화

□ 매입임대 기금 용자 중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 9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1.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④ 거래제한 및 단속

- 전매제한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 불법거래 단속 강화 및 거래 투명성 확대 □ 관계기관 합동조사

⑤ 기타(지역, 대상 등)

□ 투지지역 등 지정 및 관리

□ 재개발·재건축 규제

- 조합원 주택 공급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분양권 전매 제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등 재당첨 제한

- 10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청약제도 관리 강화

- 운영의 공적관리 강화
- 부정 당첨에 관한 관리 강화
- 분양권 등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배정

□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 수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이상)
-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전국,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우선 적용

- 11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

-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건보료 감면

□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 거주기간, 임대료 인상 상한폭, 권리 및 거래안전 강화
- 임대차 3법 : 재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정비 및 관리 강화
-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 12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2) 유형별 주요 정책

[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등

-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

- 13 -

2.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수단

3) 주거복지-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지원방안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 청년주택 30만호 공급: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호) 25만호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초과세 ○ 맞춤형 전월세 대출: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 정보 제공, 교육 강화: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신혼부부	○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 특별공급 2배 확대: 국민, 공공 15→30%, 민영 10→20% ○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구입) 1.2~2.1%, (전세) 1.70~2.75%
고령층	○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무장애 설계 적용, 복지서비스연계,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터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 주거급여 강화: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지원주택 도입: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 비주택 거주자 지원: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중증장애인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공급 ○ 아동 빈곤가구 지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 재난 피해주민 지원: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 내진 보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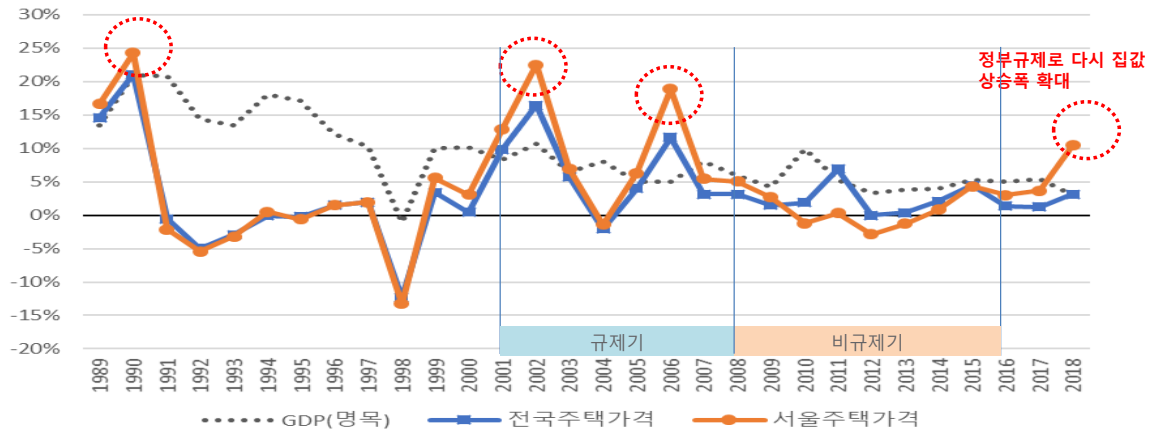
- 14 -

3. 주택시장 추이

[주택가격 변동 추이]

- **규제기('01-'08)**에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주택가격 일시적 급등 현상 발생, **비규제기('09-'16)**에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슷한 패턴으로 유지

GDP성장률과 주택가격 변동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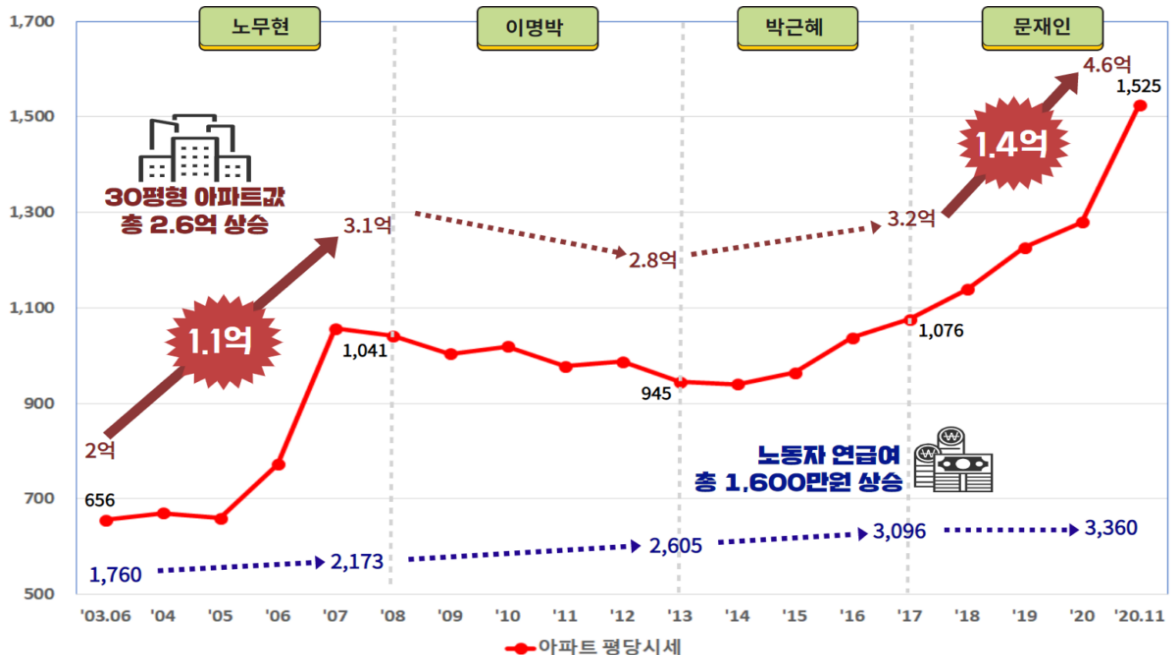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명목기준), 국민은행(전국 및 서울 연달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 출처 김덕례, 2020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2019, 10, p.9.

- 15 -

3. 주택시장 추이

[역대 정권별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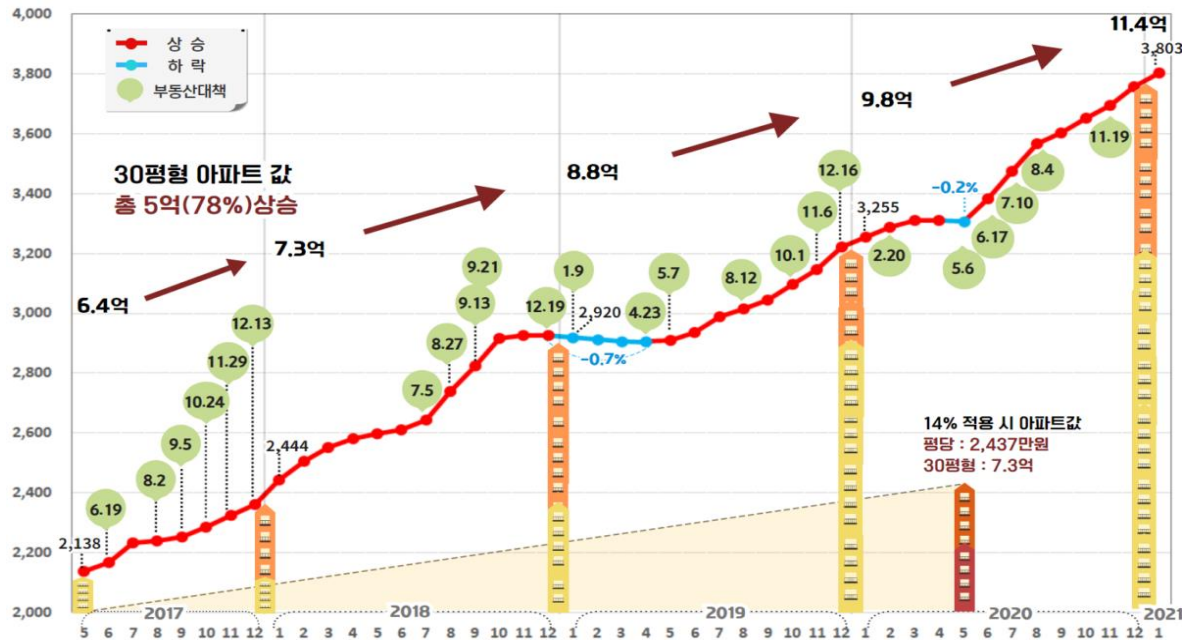


※자료 :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7개 단지 6만 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자료, 2020년 12월22일

- 16 -

3. 주택시장 추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와 서울시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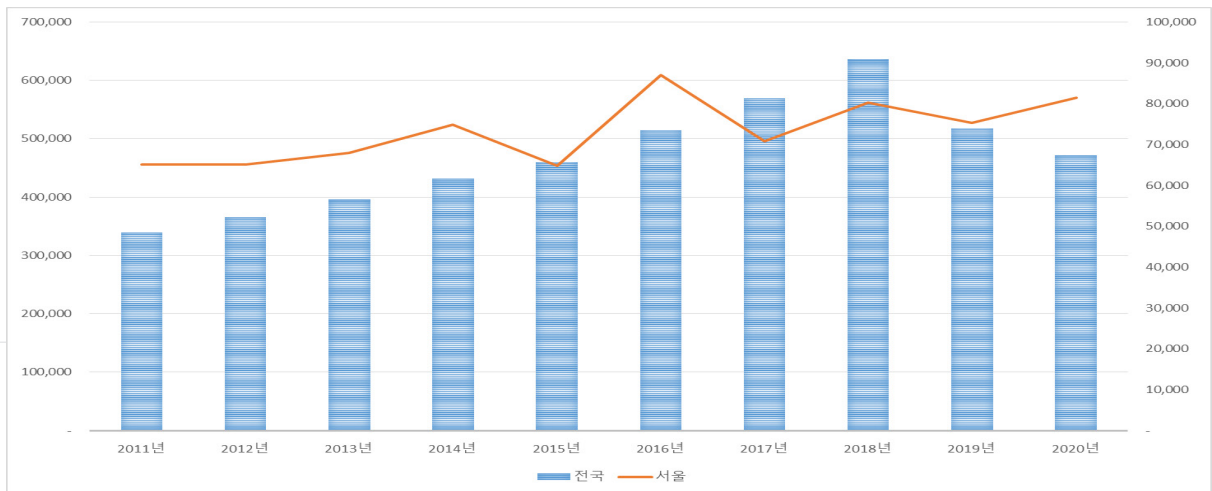


※자료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자료, 2021년 3월 3일

- 17 -

3. 주택시장 추이

[주택준공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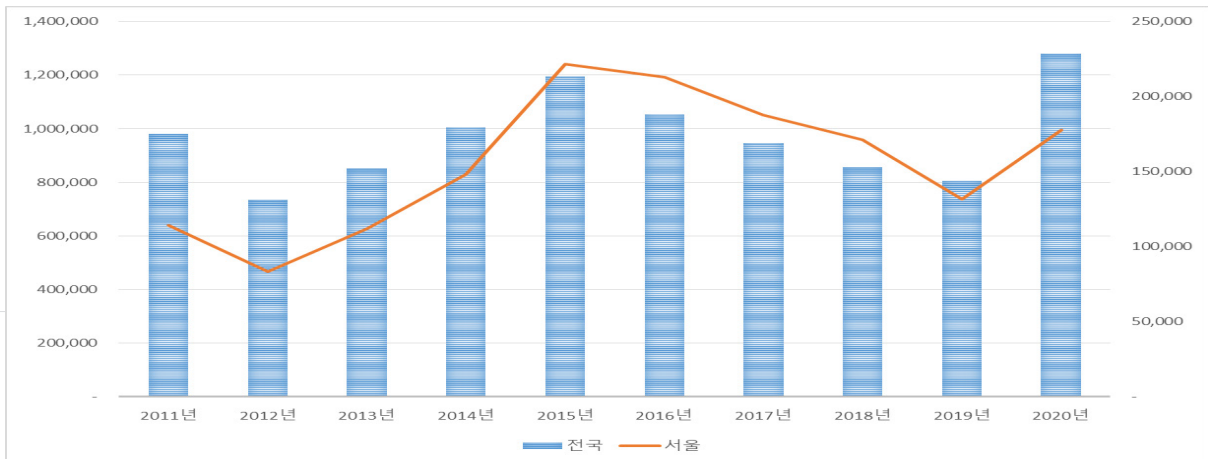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338,813	365,053	395,519	431,339	460,153	514,775	569,209	636,494	518,084	471,079	470,052
서울	65,093	65,115	67,898	74,818	64,762	86,937	70,784	80,292	75,373	81,406	73,248

※ 출처 국토교통부

- 18 -

3. 주택시장 추이

[주택매매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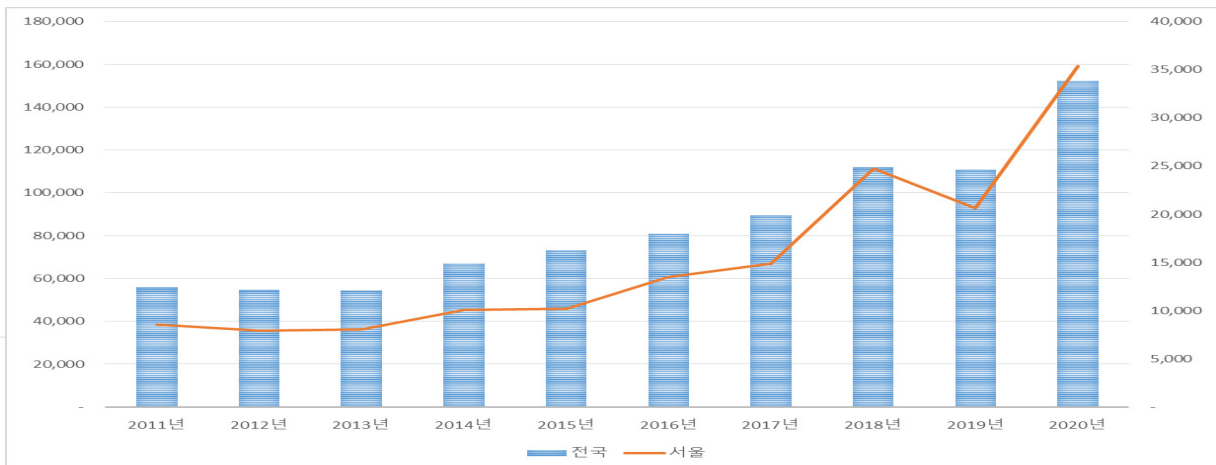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981,238	735,414	851,850	1,005,173	1,193,691	1,053,069	947,104	856,219	805,272	1,279,305	970,834
서울	114,315	83,257	111,889	148,266	221,683	212,978	187,797	171,050	131,379	177,757	156,037

※ 출처 국토교통부

- 19 -

3. 주택시장 추이

[주택증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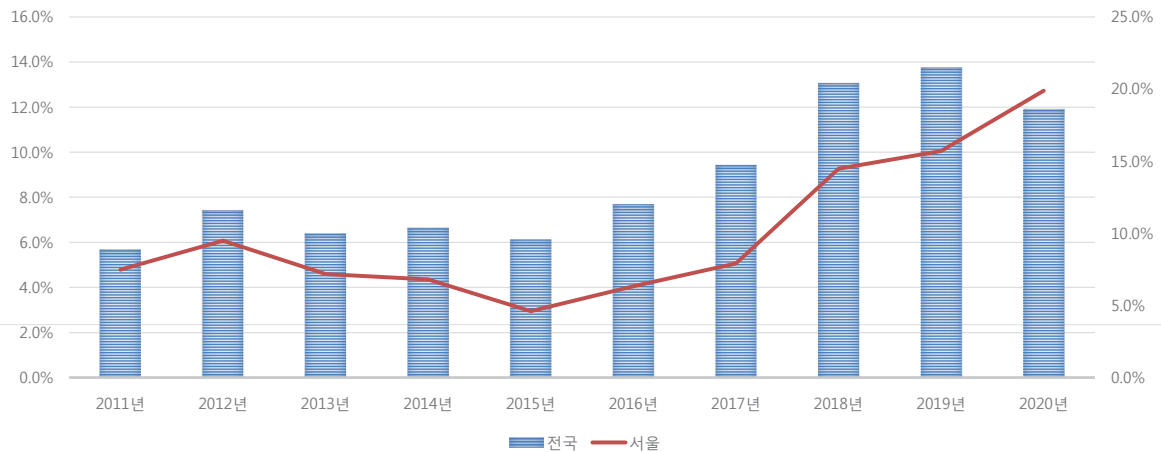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55,901	54,626	54,464	66,893	73,149	80,957	89,312	111,863	110,847	152,427	85,044
서울	8,557	7,902	8,029	10,097	10,221	13,489	14,860	24,765	20,637	35,353	15,391

※ 출처 국토교통부

- 20 -

3. 주택시장 추이

[매매건수 대비 주택증여 비율]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년평균
전국	5.7%	7.4%	6.4%	6.7%	6.1%	7.7%	9.4%	13.1%	13.8%	11.9%	8.8%
서울	7.5%	9.5%	7.2%	6.8%	4.6%	6.3%	7.9%	14.5%	15.7%	19.9%	10.0%

※ 출처 국토교통부

- 21 -

3. 주택시장 추이

2022년 우상향변수+우하향변수 , 대선 후 정책 등 상존

1. 시장의 유동성(금리, 대출규제 등 변화)
2. 세계경제의 상황
3. 대선에 따라 규제 강화 VS. 규제완화
4. 수도권 공급량 감소, 광역시 공급량증가 -양극화
5. 로또분양에 대한 기대수요 지속
6. 재고주택의 노후화, 멸실 주택 증가로 인한 수요

- 22 -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가격제한

▪ 분양가상한제 등

- 효과 : 주택가격 하락? ⇒ **가격 급등**
- 문제점 : 신규주택공급 감소

□ 세제

▪ 양도소득세

- 효과 : 과도한 양도차익 방지? ⇒ **거래량 급감**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 감소

▪ 보유세 등

- 효과 : 재고주택 공급 증가? ⇒ **양도세 부담으로 버티기**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 감소

- 23 -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금융

▪ 대출규제 강화

- 효과 : 주택가격 하락? ⇒ **실수요자 자금조달 어려움, 대출이자 부담 증가**
- 문제점 : 거래량 감소(특히 중산층 이하 무주택·1주택자)

□ 거래제한 및 단속

▪ 전매제한

- 효과 : 투기 수요 억제? ⇒ **실수요자들 간 거래 원천 차단**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 불법거래 단속, 관계 기관 합동 조사 등

- 효과 : 거래질서 확립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 24 -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유형1. 투기수요 억제, 차단]

□ 기타(지역, 대상 등)

▪ 투기지역, 재건축 규제 등

- 효과 : 투기수요 억제, 불공정 소득 환수? ⇒ **정책적 효과 미비**
- 문제점 : 거래량 감소, 신규주택 공급 감소

- 25 -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유형2. 실수요자 및 서민 주택공급 확대]

□ 청약제도 관리 강화, 청약제도 개편

- 효과 : 무주택자에 기회 확대
- 문제점 : 1주택 실수요자 청약시장에서 배제, 재고주택시장으로 이동

[유형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효과 :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
- 문제점 : 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유형4. 신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 효과 :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 ⇒ **실제공급량 0, 효과 없음**
- 문제점 : 공급시기가 5~10년 후, 현재 효과 없음

- 26 -

[유형5. 주거복지]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미흡함.
-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임.
-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103만 가구(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함.

1) 공급량 감소

[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 양도세 강화 VS 보유세 강화
 - 매도 시 양도세 부담(단기) > 보유세 부담(장기)
 - **보유(관망)** : 집값 상승분(단기) > 보유세 부담(장기)
 - **증여** : 상속증여세 부담(단기) > 양도세 부담(단기)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임대주택 등록 보유(장기) > 양도세 부담(단기)
- **장기보유, 기존 재고주택공급량 감소**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 잠정 **연기**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2) 거래량 감소

□ 대출규제 강화

- 특히 **중산층 이하** 무주택, 1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 **양극화** 발생 : 고소득층은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 따라서 거래가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전매제한 : **실수요자 간 거래 원천 차단**

□ 불법거래 단속,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

□ 투기지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 등 ⇒ **실수요자 간 거래 감소**

- 29 -

4. 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

3) 가격 급상승

□ 주택가격 급등 : 과도한 시장규제

□ 임대료 상승 : 임대차보호 3법

□ 강남 등 고가주택지역이 주택가격 상승 주도

□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

- 재고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 향후 5~10년 후 공급 ⇒ 현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 없음**

□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기대 어려움

- 규제 정책 실시로 인한 단기적 공급량 감소로 인해 **고가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 **호가** 거래가 가격을 주도함.

- 30 -

Ⅲ. 결 론

5. 주택시장 안정대책

5. 주택시장 안정대책

1) 공급 측면

[기존 재고주택 공급활성화]

□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완화 or 한시적 완화
- 증여세 등 강화

[신규주택 공급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분양가 상한제 완화
- 신도시 개발 등 신규 주택공급 기간 단축

5. 주택시장 안정대책

2) 수요 측면

[세제]

□ 1주택 취득세 완화

- (현행) 9억 초과 3% - (개정) 12-15억 초과 3%

[금융규제]

- 무주택,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규제 차별화 폐지
- LTV 60-70%, DTI 60%, DSR 미적용
- 장기적으로 LTV만 적용

- 33 -

5. 주택시장 안정대책

3) 기타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 무분별한 **영끌, 빚투** 해소
- 실수요자 간 정상적인 거래유도 및 활성화
- 시장의 **자율적 기능** 회복
- 주택시장에 관한 체계화된 **통계자료** 구축
- **소득계층별** 주택정책 차별화
- **주택임대시장 강화** 및 활성화 : 주택부담 경감을 위한 해결 대안
-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제고, 지자체간의 협의)

- 34 -

4) 주거복지정책

- ☐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신혼, 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하여 **주거 사다리** 마련
- ☐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
- ☐ 주거취약계층과 전 국민주거복지실현의 **정책 선택**
- ☐ **주거복지예산**의 확보방안 마련
- ☐ 저소득층 고령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 고령자 친화적 설계와 시설**의 공급 확대

감사합니다.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2018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7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1. 11. 10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자:

1.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3.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본 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데일리안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31339373320664>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1000503> 뉴스핌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16> 환경일보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202 성남일보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42> 시사포커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521> 글로벌경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880 한국NGO신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144> 충청일보
<http://m.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50> 복지연합신문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제시대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핌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제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젠테이션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_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제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젠테이션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gnews1268.com> 한민MG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폴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UNET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해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흙플러스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촬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운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원)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전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옥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충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중·노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공감여행

-일시: 2021년 11월 16(화)

-장소: '아침고요수목원

-참여대상: 중년 20명, 노년20명

2 토 론 회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 차기정부의 복지관련 분야별 정책에 바란다-보건/고용노동/교육/주거

-포스터 첨부

3. 자원봉사

-일시: 2021년 12월 24일(금) 오후 1시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터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3) 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 시 2021.06.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축 사 김 대 완 전 노동부 장관

격려사 이 갑 산 명예회장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주제발표 김 태 기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1.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2.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3.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 김 대 광 청년
(취업이후 창업)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 ZOOM 링크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ZOOM 링크  회의 : ID 995 942 4971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협력 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6.33명
(1965)

2.06명
(1983)

1.23명
(2010)

0.98명
(2018)

0.84명
(2020)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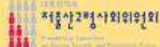
2021.08. 24(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축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양 금 희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김 창 순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제 발표자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토론자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플랫폼 토론회



일시 2021. 9. 15 (수) 오후2시30분
주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발표자

김 원 식 교 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영 용 회 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 광 병 교 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이 상 철 실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00조원 돌파한 국가부채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래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물 교수

(단국대학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1.11.10(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속사 김 상 훈 국회의원

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론자 조 성 환 교수
(정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자선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일시 2021.12.10(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군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10. 15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강화도 화도면 고구마캐기)



2021.10. 22~23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충북 보은 대추파기, 괴산)



2021.11.04. 양평용문사 야외공연장 제 7회 중장년세대 양코르 한마당-힐링산책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2021.11. 16 警友어르신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가평 아침수목원, 양평 두물머리

